

韓-中 방송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경재 방통통신위원장(왼쪽)은 지난 16~18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 방송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파이푸차오 총국장(장관급)과 만나 두 나라 방송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제공=방통통신위원회>

서울경제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A37면 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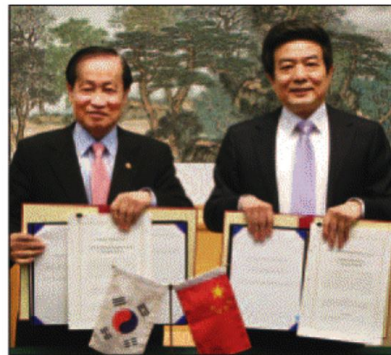
# 쓰촨성 지진 피해 선פל, 중국 감동시키다

운동본부, 中 CCTV에  
선פל 1만개 모은 추모집 전달  
청소년문화센터 기금도

한국 청소년들의 선פל(착한 댓글)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4월 중국 쓰촨(四川)성 대지진 때 우리 네티즌들이 올린 선פל은 무려 1만여개. 이 선פל들이 모여 지진피해 주민들에 전달됐다.

19일 선פל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와 방통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쓰촨성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선פל추모집 전달식'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선פל 1만여개가 담긴 '선פל추모집'이 중국 CCTV 화카이 부처장에게 전달됐다.

이 '선פל추모집'은 선פל운동본부가 지난해 4월 쓰촨성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개설한 '추모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난 18일 이경재(왼쪽) 방통위원장과 차이푸차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총국장이 방통통신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통위

글들을 묶은 것이다. 지난해 4월 20일 쓰촨성 야안(雅安)시 루산(蘆山)현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 선פל운동본부는 또 선פל콘서트 등을 통해 조성된 지진피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기금'을 마

오후이 야안시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을 비롯해 권영세 주중 중국대사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병철 교수는 "가족 간 선פל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이웃 간 선פל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간 선פל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며 "쓰촨성 '선פל추모집'에 담긴 한국 청소년들의 마음이 지진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의 방송 콘텐츠와 선פל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16~18일 중국을 방문한 방통위원장은 이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루웨이 주임과 만나 선פל 운동 확산 등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פל운동본부도 이날 인민일보 인민망과 '선פל운동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선품운동본부, 中 인민일보와 선품운동 실천 협약**

선품운동본부가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 캄핀스키호텔에서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과 선품운동 실천협약식을 하고 있다. 휘화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부총재, 김춘진 국회 선품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민병철 선품운동본부 이사장(사이버공공외교대사), 김종태 국회 선품정치위원회 간사, 가오잔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국장(앞줄 왼쪽부터)이 구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017면 IT 미디어 과학

**이경재 위원장, 中CCTV등 방문... 콘텐츠 교류 논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지난 16~1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신문출판관전총국,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등을 방문, 국내 방송콘텐츠의 중국 확산을 모색했다.

방통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도 중국 방송·통신분야에 가능한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9일 밝혔다.

양국은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프로그



방송서비스분야 다자간 협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정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급 협의체를

랩 제작 등 방송사업자간 협력 촉진 △UHD TV(초고화질 TV) 등 방송기술정책 △방송주파수정책 △방송기술 및

구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위원장은 후잔판 CCTV 회장을 만나 국가신문출판관전총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KBS, EBS 등 우리 방송사와 CCTV간 활발히 공동제작을 진행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루웨이 주임(장관급)을 만나 실무급 협의체 구성 등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차이푸차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이 방송통신 협력·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 한·중 방송콘텐츠 교류 확대

### 방통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협력 다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방송통신 협력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차이푸차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장을 만나 라디오·텔레비전 분야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 프로그램 교류·공동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UHD TV 등 방송 기술 정책△방송 주파수 정책 △방송 기술 및 방송 서비스 분야 다자간 현안 등이다.

이 위원장은 “한·중간 우호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 방송 분야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양국이 방송통신 분야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개방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kim@etnews.com



지난 17일 중국 북경 캄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쓰촨성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선플 추모집 전달식’에서 김춘진 국회선정정치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김종태 국회선정정치위원회 간사, 가오지안원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선플운동본부, 쓰촨성 지진피해 추모집 전달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지난 17일 중국 북경 캄핀스키호텔에서 ‘쓰촨성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선플 추모집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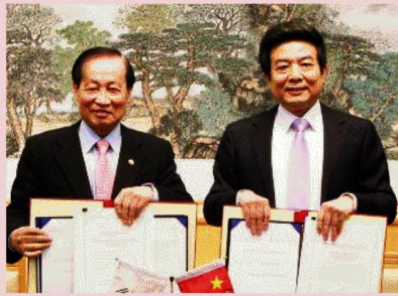
국내 선플지도교사와 청소년선플누리단, 쓰촨성 야안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 4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올린 선플 1만여 개를 모아 만든 선플추모집을 중국 CCTV 화카이 부처장에게 전달했다. 또 선플 콘서트로 조성된 지진 피해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기금도 쓰

촨성 야안시 마오후이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과 선플운동본부의 선플운동 실천 협약식도 체결됐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가족간 선플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이웃 간의 선플은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국가 간의 선플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며 “쓰촨성 선플추모집에 담긴 한국 청소년들의 마음이 지진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이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총국장을 만나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공=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023면 피플

## 이경재 위원장, 방송 콘텐츠 울타리 제거

### 차이푸차오 中 국가신문 총국장과 라디오·TV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중앙텔레비전 등을 방문하고 국내 방송 콘텐츠 확산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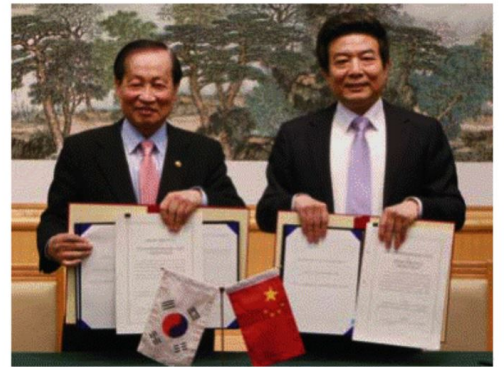
이 위원장은 중국 방송 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총국장을 만나 양국 방송·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 프로그램들과 국내에서 방송 중인 중국의 프로그램, 채널 등을 소개하고 “한·중 간 많은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송 분야의 경우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가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도 중국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가능한 한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UHD TV 등 방송기술 정책, 방송 주파수 정책, 방송기술 및 방송 서비스 분야 다자간 현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정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급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후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차이푸차오 총국장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 설명하고 KBS, EBS 등 국내 방송사와 CCTV 간 활발히 공동제작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루웨이 주임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선플 운동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권영세 주중국 대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선플운동본부에서 중국 쓰촨성 주민들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댓글을 모아 만든 선플 추모집 전달 행사에도 참석했다.

이한선 기자 griffin@

### 이경재 방통위원장 訪中 '콘텐츠 한류' 전파 앞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16~1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중앙텔레비전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국 방송 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차오 총국장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졌다.

이 위원장은 “한·중간 많은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방송 분야의 경우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가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도 중국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가능한 한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국은 구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 사업자 간 협력 촉진 △초고화질(UHD) TV 등 방송 기술 정책 △방송 주파수 정책 △방송 기술 및 방송 서비스 분야 다자간 현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 향후 정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후잔판 회장을 만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KBS·EBS 등 우리 방송사와 CCTV간 활발히 공동제작을 진행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은 국내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루웨이 주임(장관급)을 만나 실무급 협의체 구성 등 양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권영세 주중 중국대사,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선플운동본부’에서 중국 쓰촨성 주민들에게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댓글을 모아 만든 ‘선플 추모집’ 전달 행사에도 참석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한·중 관계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윤복음 기자 bogom@

## 朝鮮日報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A31면 사람들

### 이경재 위원장, 중국과 방송 협력 협약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6~18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양국 간 방송 분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위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가능한 한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 디지털타임스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006면 정보통신

### 한·중 방송분야 협력 MOU 체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위원장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방문, 중국 방송규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차이푸 차오 총국장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방송 프로그

램 교류 및 공동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 사업자간 협력 촉진 ▲초고화질(UHD) TV 등 방송기술정책 ▲방송 주파수 정책 ▲방송기술 및 방송 서비스 분야 다자간 현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분야는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추세”라며 “상호

주의 원칙에 입각해 우리도 중국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가능한 한 개방하고 중국도 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특히 루웨이 주임이 방통위가 지원하는 ‘선플 운동’에 높은 관심을 보여 중국에서도 선플 운동이 전개되는 소위 ‘선플 한류’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 MBC 프리랜서들 “이달 중 임금 체불 진정서”

“휴일·야근수당 수년간 못받아”  
‘특수고용’ 법적 분쟁 본격화

MBC와 SBS아트텍의 프리랜서들이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으로 차별당했다고 노동당국에 진정·구제신청을 내 방송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시리즈 8·9면

MBC 본사 컴퓨터그래픽팀 소속 프리랜서 정모씨(35) 등은 19일 MBC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진정서를 이달 중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07년 입사 후 8년간 연차는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고 휴일·연장·야간 근로수당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다가 2년 전부터 시간당 평일 5000원, 휴일 7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역시 가산수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장근로 시 시급에 50%를 더한 수당을 주도록 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컴퓨터그래픽팀 직원 80명 중 40명 이상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공식 직제’에 편재돼 정규직과 혼재된 업무를

하고 있다”며 “관리자들은 2007년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시행을 전후해 계약직을 프리랜서로 전환하면서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프리랜서들을 회유하며 위법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MBC는 계약 형식에 상관 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차별을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SBS아트텍의 프리랜서 출신 직원 배모씨도 지난 7일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제기했다. 배씨는 “아트텍이 정규직 채용 약속을 어기고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판정돼 지난해 7월 복직이 이뤄지자 징계위에 회부해 두 달 만에 다시 보복성 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MBC와 SBS아트텍 측은 경향신문의 소명 요구에 공식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진구 기자(공인노무사)  
kangjk@kyunghyang.com

# SBS 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하자 다시 해고

## 방송사 차별 횡포 만연

MBC와 SBS 자회사 아트텍의 프리랜서들이 임금체불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방송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문제가 굵을 대로 굵아 통제불능 상태까지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SBS 자회사인 아트텍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제기한 배모씨는 19일 SBS로부터 세 번 배신을 당한 사연을 털어냈다. 배씨가 최초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은 1999년. 배씨는 SBS아트텍에 프리랜서로 2년6개월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로 간접광고(PPL)를 도입했다. SBS에 큰 수익을 가져다줬지만 정규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배씨는 2003년 두 번째로 신규사업 제안을 요청받고 'SBS 옥션사업'을 기획해 1년8개월간 무보수로 일하며 사업을 정착시켰다. 하지만 정규직 채용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 그 뒤 방송사 꿈을 포기하고 배씨는 가업을 물려받아 월 순익 1000만원이 넘는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러던 차에 SBS가 2010년 '보컬로

이드'라는 캐릭터 사업을 다시 제안했다. 이번에는 담당팀장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설마 '세 번씩이나 배신할까'라는 생각에 배씨는 가업을 정리한 후 2년2개월간 마케팅 업무를 맡아봤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보컬로이드 사업이 폐지되면서 배씨는 또다시 버려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배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복직 판정을 받았다. SBS는 업무위탁을 맺은 프리랜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메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자 배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SBS는 배씨가 복직하자마자 징계 대상으로 통보하고 이력서 허위학력 기재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다시 해고했다. 배씨는 "회사안팎에서 '다른 프리랜서들이 보고 있는데 순순히 정규직 복직을 받아주겠느냐'는 말이 나돌았다"며 "학력 문제는 과거 계약 때 사측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배씨의 사연은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프리랜서들을 노동법 사각

## 지상파 방송 3사의 미술부문 인원·인건비 비교(2011년 기준)

	인원(명)		인건비(만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SBS 아트텍	116	308	6468	3226
MBC 미술센터	173	228	4538	2671
KBS 아트비전	139	388	3948	3073

자료:SBS아트텍 경영지원팀 작성 내부 문건 (2011년 3월23일)

지대에 내몰며 각종 차별과 해고를 남발하는 방송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MBC 본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진정하기로 한 프리랜서 컴퓨터그래픽(CG) 디자이너 정모씨(35)도 마찬가지다. 정씨는 "2007년 프리랜서가 된 뒤 해마다 정규직 전환의 꿈을 안고 8년 가까이 버텼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회사를 믿고 기약없는 프리랜서 생활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BC는 그간 프리랜서에게는 연차와 연장근로수당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다가 불만이 커지자 2년 전부터 통상임금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시간당 평일 5000원, 휴일 7000원의 연장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 한도를 6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해 연봉액에 반영해 매달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생각한다면 상상하기 힘든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SBS아트텍의 '방송3사 미술부문 인원 및 인건비 현황 비교(2011년 기준)' 문건은 간접고용을 통한 '착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SBS아트텍은 직원 424명 중 308명(73%), MBC미술센터는 401명 중 228명(57%), KBS아트비전은 527명 중 388명(74%)이 간접고용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1인당 인건비는 SBS아트텍이 6486만원 대 3226만원, MBC미술센터가 4538만원 대 2671만원, KBS아트비전이 3948만원 대 3073만원이었다. 방송3사는 미술인력의 68%를 간접고용에 의존했지만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62%에 불과했다. 방송3사의 화려한 화면·조명·무대 뒤에는 간접고용돼 상시적 해고 위협과 차별적 임금에 시달리는 프리랜서 등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해고 무효 판결받은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

# “박 대통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 지켜야”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갤러리 페이퍼버스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해직 후 스피커를 만드는 일을 배우며 분한 마음을 다스렸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후배들 못 도와줘 미안한 마음  
해직 후 취미로 목공예 배우  
‘수제 스피커’ 회사 차리기도

“(박근혜 정부도) ‘정권의 안보 수단’으로 언론을 보는 이명박 정부와 똑같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의 이사 수가 대통령·여당 추천 각 3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공영방송이 정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MBC 파업이 정당하며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박성제 전 MBC 노조위원장은 18일 서울 한남동의 한 갤러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최소 3년, 아니 그 이상 걸릴지 모르는 싸움”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법원 판결 직후 YTN 해직기자로부터 “‘이제 시작이란 걸 알지?’란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앞으로도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게 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시간 싸움일 뿐 결국은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MBC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음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김종국 사장이 연임을 위해 보수적 성향의 방문진 이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1993년 MBC에

입사해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2012년 6월 해직됐다. 국장과 부국장급 기자들도 파업에 동참하던 때였다. 당시 1차와 2차에 걸쳐 약 70명이 대기발령을 받았다.

그는 후배들을 더 걱정했다.

“공정보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매일 억눌리는 후배들을 도와주지 못해 오히려 미안합니다. 곧 현장에서 만날 테니까 후배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철도파업 얘기도 꺼냈다. 그는 “지난달 22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마친 철도노조를 보며 2012년 170일 동안의 파업을 접었던 순간이 떠올랐다”며 “조합원을 지키면서, 어차피 단기에 끝나지 않을 ‘공공성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직 후 분노를 억누르려 취미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스피커를 수제로 만드는 ‘PSJ 디자인’이란 회사까지 차렸다. 박 전 위원장은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자신이 디자인한 스피커를 소개하면서 “‘사장님’이란 말보다 ‘기자’라는 호칭이 편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아빠는 왜 출근하지 않느냐’고 물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팠죠. 딸과 아들에게 복직한다고 말할 수 있어 기뻐요.”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 “KBS 수신료 사용내역서 국회 제출해야”

## 민주 노웅래의원 “광고수입등 혼용 회계처리… 투명성 확보 필요” 방송법 개정안 발의

‘내가 낸 KBS 수신료는 어디에 얼마나 쓰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알 길이 없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와 광고수입 등을 혼용해 회계처리를 하는 탓이다. 수입별로 지출하는 곳이 표기되지 않아 수신료 집행내역만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KBS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자료를 보면 국민들에게 받은 수신료 수입은 5851억원. 하지만 비용내역에는 별도 재원 표시 없이 방송사업비, 시청자사업비, 판매관리비 등 지출항목 별로만 집계됐다.

공영방송 강화를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입

장에선 수신료가 어떻게 공영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달 초 KBS 결산 제출시 수신료 사용내역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수신료 산정을 담당하는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인 산정·배분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의장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 의원은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 사용내역서 및 부속서류를 내도록 하면 수신료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만큼 독립된 기구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분리회계 도입의 필요성은 KBS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K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인사 김주언·이규환·조준상·최영목 이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신료 관리운용 규정 제정안’을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 때 제출했다.

이들은 “시청자들은 수신료 수입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

다”면서 “현재 KBS는 수신료 사용과 관련된 어떤 기준도 없다. 그저 일부 프로그램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됐다’는 자막만 띄운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KBS의 채널별 회계분리를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말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영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BBC는 채널별 회계분리를 통해 연간 사용된 비용을 집계, 공표한다”면서 “수신료 납부주체인 국민에게 모든 채널의 구체적인 운영실적을 공개하는 게 공영방송의 효율적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

# “연봉 1억 57% 아닌 35%” KBS 적극 해명 했지만 연봉내역 몰라 의문여전

KBS가 메인뉴스를 통해 “1억원 이상 연봉자는 직원의 35%”라고 해명했지만 보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

지난 18일 KBS '9시 뉴스'는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역대 연봉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회사 측(KBS)이 밝혔다. KBS가 직원의 연봉을 전수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연봉자는 57%가 아닌 35%였다는 게 근거다.

이 뉴스는 앞서 KBS의 수신료 현실화 방안이 발표된 뒤 사실과 다른 기사 등이 퍼져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언급했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16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이 KBS에서 제공받은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을 인용, KBS 전체 직원의 57%가 역대 연봉자라고 보도한 것을 메인뉴스를 통해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KBS 전수조사의 기준과 인건비 현황을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KBS가 최 의원실에 제공한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 측이 해당 연봉은 성과급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어서 평균 9612만3000원을 받는 2직급(2358명)도 실제 연봉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예컨대 연봉에는 퇴직금이 빠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정부는 코레일 직원들의 연봉을 퇴직급여를 포함해 6900만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KBS 역시 코레일 직원들의 연봉을 보도할 때 “퇴직급여를 뺀 6300만원 대신 69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보도 직후 KBS의 해명도 논란을 샀다. KBS는 지난 16일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성과급 제도 자체가 없다”며 “1억원 연봉이라 하지만 실수령액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선”이라고 주장했다. 하

KBS 직원 평균 보수 \*단위:천원

연도	기본급	수당 등	합계	평균 근속기간
2009년	29,830	51,404	81,234	17년11월
2010년	41,368	42,361	83,729	18년3월
2011년	45,601	45,386	90,987	18년
2012년	46,106	46,652	92,758	18년5월

\*자료:KBS. 수당등:상여급 및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결산서상 상시종업원수에 의한 평균금액

지만 역대 연봉 논란은 오히려 확대됐다. KBS의 이번 전수조사는 2012년 기준이어서 지난해 역대 연봉자가 늘어났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13년 결산이 끝나지 않아 지난해 KBS 직원들의 보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면 2직급 연봉도 9612만3000원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KBS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월 기본급 2.493% 인상을 반영했고 명절 상여급 70만원을 증액했다. 기본급 인상률

## KBS자료 2012년기준 코레일 연봉 보도처럼 퇴직급여 등 포함하면 '35%' 넘을 가능성 높아

만큼 연봉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2직급 연봉은 9851만9000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증액한 명절 상여급 70만원을 더하면 2직급 연봉은 9921만9000원으로 1억원에 더 가까워진다. 게다가 5000명에 육박하는 KBS 직원의 평균보수는 9000만원이 넘는다. KBS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KBS 직원의 평균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해 9275만8000원이다.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8년5개월이다.

KBS는 “현재 KBS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은 국내 다른 방송사의 88% 정도에 불과하다”며 경쟁사로의 인력유출에 대한 고충을 보도했다. 하지만 KBS는 앞서 지난 15일 고위직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인적자원에 의해 콘텐츠의 질이 결정되는 방송산업의 특성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 인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화열 기자 tootsie@

# 종편 ‘방송광고 대행’ 미디어렙 설립 본격화

## 오늘 방통위 허가신청 공고… “각사 자본금 수십억 규모 주주모집 돌입”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들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편PP들은 현재 30~40명 규모로 미디어렙 설립을 준비한다. 현재 자체적으로 보유한 영업본부보다 10~20명 정도 많은 규모다. 현재 유일한 방송사의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가 100여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SBS 광고매출 등 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초기자본금은 수십억 원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다.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현재 각 종편PP는 미디어렙 설립을 위해 주주모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

졌다. 방송광고 판매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을 포함, 한 주주는 지분 4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이 기준이 신문사들은 10%로 낮다. 미디어크리에이트 역시 최대주주인 SBS 지분율은 40%며 일본 케이블TV사업자 주피터텔레콤 20%, 다음커뮤니케이션 10%, 씨유미디어 5%, 해덕스틸 5%, 지역민방 등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했다.

종편PP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허가신청 공고를 하면 27~29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BN은 하반기에 미디어렙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종편PP는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미디어렙 적용을 받지 않는데 MBN 승인일은 오는

11월30일로 승인일이 4월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N은 다른 종편과 달리 11월 말까지 직접 방송광고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종편PP들이 신청한 미디어렙이 방통위 허가 신청에서 탈락하면 종편PP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나 다른 종편PP가 설립한 미디어렙에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종편PP들이 미디어렙을 만들면 지금과 영업방식이 달라질 전망이다. 미디어렙은 방송광고 외 다른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지금까지 종편PP들이 방송광고와 신문광고를 결합해 판매할 수 있었지만 미디어렙을 통하면 결합판매를 할 수 없다. 이학렬 기자 tootsie@

# 2790억원부터... ‘주파수 전쟁’ 재점화

## 미래부 ‘2.5GHz LTE-TDD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정부가 시분할통신(LTE-TDD) 서비스가 가능한 2.5GHz 40MHz 폭 주파수를 최저 2790억원부터 경매에 내놓는다. 와이브로 주파수보다 5배가량 비싼 경매가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권을 획득하더라도 기존 이동통신사만큼 주파수 가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여서 강력 반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2.5GHz TDD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와이브로는 523억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 복수 이상 사업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LTE-TDD 최저가인 2790억원(5년간)부터 경매가 시작된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계획 수립에 앞서 LTE-TDD 서비스를 이동통신으로 분류했다.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와 달리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는 재화로 판단한 것이다.

## 523억 와이브로보다 5배가량 비싸 제4 이통 신청 ‘KMI’ 강력 반발 토론회서 의견 수렴 후 이달 확정

2790억원이라는 가격도 기존에 경매에 붙인 LTE-FDD 주파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주파수 경매에서 2.1GHz 40MHz폭을 최저가인 4788억원에 할당받았다. 해당 대역 사용기간이 8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년으로 사용기간이 설정된 2.5GHz 40MHz폭 가격은 기존 이동통신용 주파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신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LTE-TDD로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KMI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KMI는 그동안 신규 사업자핸디캡을 인정해달라는

이른바 ‘비대칭 규제’를 주장해왔다.

1년 반 정도 걸리는 전국망 구축 기간을 감안하면 2300억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KMI 관계자는 “사업 계획상 허가를 얻은 뒤 최소 15개월이 지나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며 “구축 기간을 감안하면 아무리 이동통신용이라도 최고 2300억원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제4이통을 이미 수백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기존 이동통신사와 똑같이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 통신사는 이번 할당대가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LTE-TDD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통신 서비스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0일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1월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제4이통, LTE-TDD로 가닥

## 미래부 오늘 2.5GHz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

### 입찰 최저가격 LTE-TDD 2790억·와이브로 523억

▶관련기사 5면

정부의 2.5GHz 주파수 할당공고를 계기로, 지난 2010년 이후 5번째 진행되는 제4이동통신사 선정 작업 끝에 새로운 이통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선정 절차는 과거와 달리 전세계에서 급부상중인 LTE-TDD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지 통신 생태계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GHz 대역을 LTE-TDD 또는 와이브로 서비스 용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20일 발표한다.

미래부는 전과정책국이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해 주파수 할당여부 적합성을 심사하고, 통신정책국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대한 병행심사 방식을 통해 최종 제4이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미래부가 할당하는 대역

은 2.5GHz 대역 40MHz폭(2575~2615MHz)으로, 오름입찰식 경매로 할당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 최저경쟁가격은 LTE-TDD로 신청할 경우 2790억원, 휴대인터넷 용도인 와이브로로 신청할 경우 523억원이다.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미래부가 LTE-TDD 쪽에 이번 주파수할당과 제4이통사 선정의 무게를 싣는 움직임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세계 생태계에서 고립돼 가는 와이브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가 LTE-TDD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왔다.

주파수 가치 면에서도 예상매출과 가입자, 사용기간, 대역폭 등의 준거를 통해 제시한 2790억원이라는 가격은 LTE-TDD의 가치를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의 가치에 거의 유사하게 가깝게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주파수 할당공고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복수의 통신사업자가 허가 요건을 갖출 경우 경매를 진행하게 되며, 최소입찰가격은 LTE-TDD의 가격인 2790억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사실상 LTE-TDD로 쏠려 있는 셈이다.

현재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KMI)이 LTE-TDD 방식으로, 인터넷스페이스타임(대표 양승택·IST)이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방식으로 주파수 할당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IST 측에서는 이같은 주파수 경매 방식에 대해 벌써부터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4이통사업자 심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4차례 진행됐지만 한번도 통신당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는 LTE-TDD가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된 만큼 이전보다는 선정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파수 신청서 접수기간은 1개월 이내로, 이후 약 1~2주 간 심사를 거쳐, 3월초에는 제4이통사 탄생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 제4이통 KMI-IST '2파전' 예고

## 'LTE-TDD'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대결... 투자재원 마련 총력

### 미래부 주파수 경매방식에 양측 불만고조

지난 2010년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제4이통사업자 심사과정은 LTE-TDD로 재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를 앞세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측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부의 주파수경매 안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2.5GHz 대역의

주파수할당 공고를 20일 발표키로 하면서 제4이통 사업권에 도전해 온 업체들의 움직임이 다시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신규 이통사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다. KMI는 4번, IST는 2번 도전했지만, 모두 재무적 투자자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공종렬 전 정보통신부 국장이 이끄는 KMI는 과거 와이브로 방식 대신에 LTE-TDD로 재도전에 나선다. 정부가 LTE-TDD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KMI는 설립자본금 8530억원을 마련했으며, LTE-TDD 무제한 요금제 등으로 통신비 인하에도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끄는 IST는 설립목표 자체가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에 있었

던 만큼, 한단계 진화한 와이브로 어드밴스드로 재도약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IST는 주파수할당 기간에 맞춰 7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사업권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1대 주주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승택 IST 대표는 "IST의 설립 근거 자체가 와이브로 활성화"라며 "재원마련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해결해 사업권에 재도전하겠다"고 말했다.

KMI와 IST는 그러나 정부의 주파수경매 방침에 대해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공종렬 KMI 대표는 "미래부가 LTE-TDD용으로 제시한 5년동안 2790억원의 사용료는 기존 이동통신사와 완전히 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유효경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IST는 미래부가 노골적으로 LTE-TDD 편을 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현광립 IST 부사장은 "주파수 경매에 와이브로와 LTE-TDD가 동시에 돌입할 경우 5배가 비싼 LTE-TDD의 최저경매가격 기준에 맞추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20일 진행될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 기존 요금보다 30% 싼 '제4이통' 출범 초읽기

**미래부, 2.5GHz 주파수 할당계획 곧 발표**  
와이브로 최저경매가, LTE-TDD의 5분의 1  
KMI·IST 경쟁편 하한선 2790억원부터 시작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다음주 내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업계가 제4이동통신의 출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 경우 기존 요금제보다 30%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돼 국내 통신시장의 요금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래부는 20일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5GHz주파수 대역에서 와이브로 또는 시분할(LTE TDD)방식을 허용하는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달 중 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가 2.5GHz대역에서 와이브로뿐 아니라 LTE TDD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바있다.

이번 2.5GHz주파수 경매방식은 지난해 이통 3사가 벌인 광대역 LTE주파수 경매에 사용한 혼합방식으로 20라운드까지 오름입찰을 거쳐 마지막 밀봉입찰로 선정된다.

최저 경쟁가격은 LTE TDD가 2790억원, 와이브로가 523억원이나 할당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할 경우 LTE TDD의 최저경쟁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코리아모바일인터넷(KMI)만이 미래부에

LTE TDD방식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제출한 상태로 이달말 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KMI는 2009년부터 와이브로 방식으로 네 차례 도전했으나 재무건전성 문제로 실패한 바 있다. 이에 KMI는 초기 설립 자본금 8530억원을 확보, 올해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공모주 청약 등을 통해 약 2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방식으로 미래부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IST도 지난해 재무건전성 문제로 고배를 마신 만큼 철저한 자본금 및 투자자를 확보해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통신 업계는 미래부가 와이브로 뿐 아니라 LTE TDD방식까지 허용한 만큼 이번 제4이통사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주파수 경매에 따른 가격 경쟁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앞서 주파수 할당 경매에 있어서 와이브로와 LTE TDD 할당 신청법인이 모두 경매에 참여하면 최저 2790억원부터 가격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브로로 신청한 사업자는 최저경쟁가격에서 약 2200억원을 더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제4이통사에 와이브로와 LTE TDD방식까지 허용해 신규 사업자 출범에 문을 열어둔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나올 경우 기존 통신시장에서 요금제 인하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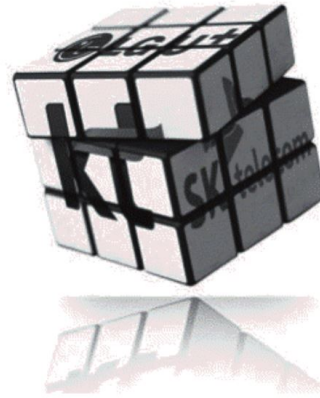
/윤복음 기자 bogom@

# 요동치는 이통사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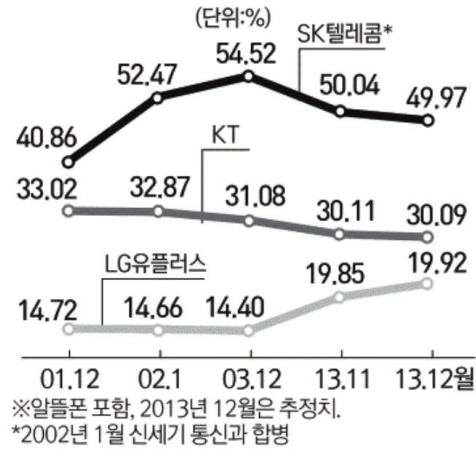
SKT 12년만에 50%대 깨질 듯  
LGU+ 20%대에 바짝 다가서  
KT 30%대 위태...반전 기회 엿보  
알뜰폰은 유통망 확대로 성장세

이동통신 시장의 점유율 변동 추이가 심상찮다. 시장 구도가 재편될 조짐까지 보인다.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과 합병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40%대로 내려 앉은 것이 유력시된다. LG유플러스는 20%대에 바짝 다가섰지만, 스마트폰 가입자 중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비중이 90%로 높아 부담이다. KT는 30%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몰려 반전을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다. 반면 알뜰폰의 성장세는 무섭다. 이처럼 통신시장이 요동치면서 보조금과 요금제, 서비스 등 마케팅 경쟁은 더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49.97%로 50%를 밑돈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알뜰폰을 포함한 SK텔레콤의 가입자는 2,728만여명으로 50.04%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번호 이동에서 줄어든 가입자를 신규로 만회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확정치가 발



이동통신3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표는 안 됐지만, 점유율 5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SK텔레콤은 “50%는 지켰고, 50%대는 지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장점유율 50%는 큰 의미를 지닌다. 2002년 1월부터 줄곧 50%를 웃돌면서 시장을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에는 54.52%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50%가 무너지기에 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남곤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50% 저지선이 깨진 만큼 점유율 하락을 그대로 놔두기는 쉽지 않다”며 “비보조금 항목에서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점유율이 계속 빠진다면 보조금 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4만명 순증을 달성하면서 시장점유율을 19.92%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60만명을 늘려 20%를 훌쩍 넘긴다는 목표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쟁자들의 견제는 훨씬 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 큰 장애물은 잠재적 LTE 고객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SK증권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의 88.1%가 이미 LTE를 사용 중이다. SK텔레콤의 71.8%, KT의 67.3%에 비해 월등히 높다. LTE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은 3G 사용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KT는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이 30.09%까지 떨어졌다. 31.0%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57만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광대역 LTE 서비스 출시를 계기로 반전에 나서면서 번호이동도 3·4분기 77만명 순감에서 4·4분기 8만여명 순감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서 잠재적 LTE 가입자인 3G 피쳐폰과 3G 스마트폰 가입자가 888만명으로 가입자의 54% 수준이다. 이통3사 중 가장 많다. 문제는 전체 LTE 가입률이 이미 50%를 넘었다는 점이다. 시장의 빈틈이 많이 메워져 수익성 높은 신규 고객을 당겨오기 힘들다는 의미다.

알뜰폰 사업자의 공세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3·4분기 19만명이었던 순증 규모가 4·4분기엔 30만명으로 많아졌다. 유통망이 우체국, 이마트, 농협 등으로 확대돼 올해도 증가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들이 절벽으로 몰리면서 시장은 더 과열될 전망이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점유율 변동이 심해 보조금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아 과열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윤종록 차관 “한 사업자가 이통시장 50% 가진 선진국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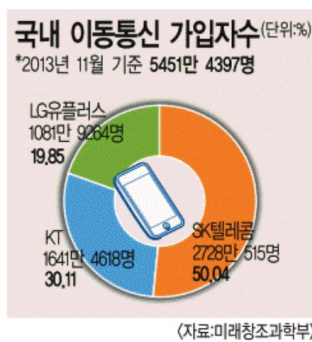
# 이통시장 판도변화 시작되나

## SKT 점유율 50.04% 차지 제4 이통 선정 긍정 해석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통통신 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제4 이통통신사 선정작업과 맞물려 국내 이통시장 시장의 구도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종록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 중 어느 나라도 한 사업자가 이통통신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곳은 없다”고 밝혔다. 윤 차관의 이날 발언은 제4이동통신의 승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온 발언이다.

국내 이통통신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SK텔레콤이 50.0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K가 30.11%, LG유플러스가 19.85%를 기록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 이통 시



장집중도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윤 차관의 발언은 고착화된 국내 이통시장 구도가 바랍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제4 이통 승인 여부와 관련해 미래부가 과거에 비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제4 이통사 사업권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은 이번이 다섯 번째 도전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제4 이통사 진입허용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이통시장 점유율이 2006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

의 통신비 인하 요구와 제4이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4이통 허가 시 기존 통신사와의 로밍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미래부도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면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차관의 이날 발언은 또 비대칭 규제정책의 기초변화 여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상호접속료 차등을 줄이는 등 꾸준히 비대칭규제를 축소시켜왔다. 윤 차관의 발언이 인위적 정책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정부의 통신정책 기초에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구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동식기자 dskang@

# 1700만명 금융정보 털려... 2차피해 우려

주민번호-카드번호-유효기간 등  
카드 3社-시중은행 고객정보 유출  
카드 재발급-비밀번호 변경 바람직  
피해자 오늘 금융사 몰려 대란 예고

1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정보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생일, 전화번호 등과 관련된 숫자는 반드시 피하는 편이 좋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돼 해커 등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로 바꿨다면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말 내내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피해로 불안에 떨던 고객들은 20일 해당 은행 및 카드업체에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카드사에 본점 내근직원 등 가용 인력들을 총동원해 고객 민원에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최근 붙잡힌 고객정보 불법유출 혐의자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에서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1억580만 건을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물론이고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 은행계좌번호, 신용등급 등 금융정보가 무더기로 들어 있었다.

중복 가입자를 제외하면 피해자 수가 약 1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USB 메모리에는 카드사 정보와 별개로 은행 고객 24만 명, 저축은행 2000명, 여신전

문회사(캐피탈) 11만 명 등 16개 금융회사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도 담겨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빠져나간 개인정보에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 뒷면 끝 번호 세 자리(CVC번호)가 없기 때문에 금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인터넷 쇼핑, 일부 국내 홈쇼핑 등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개 카드 이용고객 중 상당수는 주말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조회하는 한편 카드를 중지시키거나 재발급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보유출을 조회한 건수는 471만 건이었다. 카드 재발급을 요청한 고객도 5000명이나 됐다.

검찰은 정보유출 혐의자와 공범들이 구속돼 정보의 외부 유출은 일단 차단됐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정보유출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거된 3명의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복제돼 제3자에게 흘러갔거나 또 다른 공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이서현 기자

▶A2·3면에 관련기사

# 일주일 넘게 손놓다가... 카드사에 대책 떠넘긴 금융당국

## 금융당국이 불안 키웠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국 스스로 근본 대책을 찾으려 하기보다 카드 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은 카드를 재발급 받기 어렵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도 어려운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부터 피해여부 확인 창을 열어볼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도 금융당국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8일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3개 카드회사를 검사하고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동양그룹 후순위채 불안전판매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국이 동양증권권을 검사하고 불안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했던 때와 판박이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보 유출이 3개 카드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전체 금융사의 보안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문제점을 임의로 감추거나 축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은행 등 은행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해 당국이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이 사건 초기 금융회사 임원들을 불러 전시용 ‘호통 관치(官治)’에만 집중했을 뿐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 관련 책임자 및 금융지주사 회장, 최고경영자(CEO) 등을 불러 과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왔던 대책들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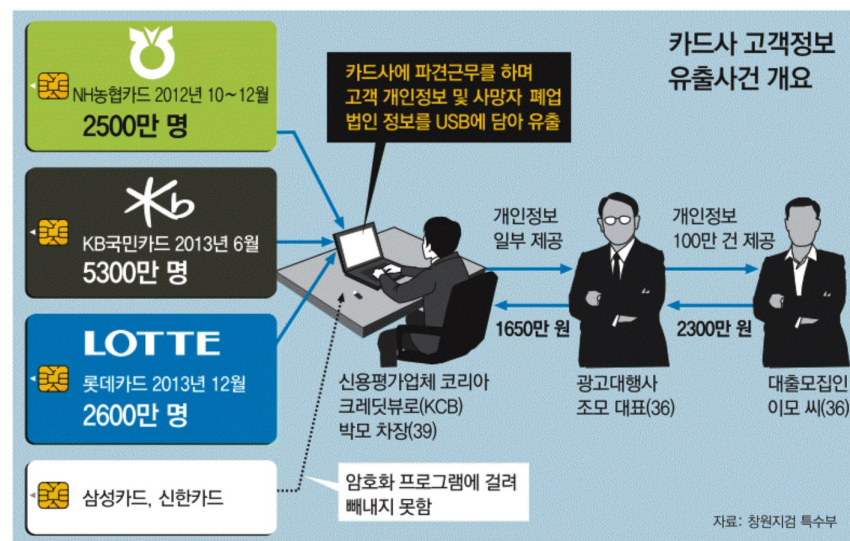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운영한 감시센터도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를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비자가 금융정보 불법유통 사실을 콜센터에 신고하면 접수요원이 상담을 거쳐 검사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검사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사와 수사에만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가 피해 확산을 억제하려는 조치라지만 한가해 보

## 카드사 전방위 실태조사 않고 CEO 호통친후 소극적 검사 거쳐 ‘감시센터’도 소비자 구제 역부족

이고 효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보유출 사태의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상당수 금융회사 CEO와 내부통제 시스템 담당 임원이 강력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해당 카드사 경영진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자진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가 금요일 오후 유출 확인을 시작해 불편을 가중했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고객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금요일 오후에 서비스를 시작했던 것이지만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이상훈 기자



# 피해 확인과정 본인 인증조차 허술 정치-연예인 등 개인정보 추가유출

## 정보관리 어떻게 하길래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업체에서 1억5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장 큰 원인은 이들 금융회사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 용역업체 직원에게 개인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를 쓸 수 있게 하는 등 금융보안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생년월일만 알면 정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뒷문 열어놓고 앞문만 단속” 비판

이번 정보유출 사태는 카드사의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해킹 등에 대비하는 ‘앞문 단속’만 요란했을 뿐 내부인을 통제하는 ‘뒷문 단속’에는 실패했다.

검찰에 구속된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차장 박모 씨(39)는 3개 카드사의 분실·위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프로젝트(FDS) 책임자로 일했다.

박 씨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기 위해 해당 카드사로부터 고객정보 이용 권한을 받았다. 원래 이런 시범 가동 때는 암호가 걸린 가짜 데이터를 써야 하지만 박 씨는 암호가 없는 진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카드 3사가 외부 용역직원인 박 씨에게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준 것이다.

박 씨는 1억 건이 넘는 정보를 USB 한 개에 담아 빼냈다. 8GB USB 1개에는 20억 건 이상의 정보를 담는 게 가능하다. 보안을 중시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업무용 컴퓨터에 일반 USB를 꽂아도 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고객 정보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면 즉시 사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통보되는 시스템

도 카드 3사에는 없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업무 편의와 한정된 정보기술(IT) 관련 예산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보안을 어설프게 하다가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정보유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허술함을 드러냈다. 국민카드는 18일 오전까지 고객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끝 번호 한 개만 알면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대거 유출됐다. 문제가 커지자 해당 카드사는 부랴부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 용역직원이 USB 들고 버젓이 출입 민감한 정보 접근 경고장치도 없어

### ● 고객정보 공유, 유출 피해 키웠다

개인정보 보안이 이처럼 허술하게 이뤄지는 데도 금융사들은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 마 카드 발급’으로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은 뒤 수익관리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다. 다방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용·대출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다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카드에서 카드에 가입한 적이 없는 KB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다량으로 유출된 것이 이런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지주사 내 정보를 공유할 때에 고객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카드 3사는 20일 정보 유출 통보 현황과 고객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신수정 기자

# “카드사, 주말이라도 문 열었어야”

### 해지-재발급 신청 전화 불통사태 일부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고객들은 정보 유출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17일 밤부터 주말 내내 카드 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돼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카드사 콜센터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항의하거나 대응 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를 요구했다.

회사원 정모 씨(36)는 18일 오전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을 발견했다. 재발급을 신청하려고 카드사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그때마다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직원과 통화하는 걸 포기했다. 그는 “우선 급한 마음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분실신고부터 했다”며 “아무리 주말이라고 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카드사 직원들이 다 출근해서 일을 처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목록을 열거하거나 유출 정보 표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수없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여권 번호까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김모 소방장(39)은 “서울시 공무원들은 NH농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년 전 NH농협카드를 발급받은 뒤 사용하지 않던 동료 소방관들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2차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주부 장모 씨(43)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해놓고 고작 고객에게 내놓은 보상이 한 달에 300원짜리 카드 사용 문자서비스(SMS)인 게 말이 되느냐”며 “집단 소송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집단 청구하기 위한 카페가 법무법인 주도로 개설됐다. 19일 현재 카페 가입자가 4500명을 넘었다. 변호사에게 착수금 9000~1만 원을 입금한 뒤 승소하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액의 15~20%를 성공 보수로 주는 방식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수정 기자

# “엉뚱한 사람이 내 카드 재발급받을 수도”

### 전문가들 “고소득자 특히 우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주소, e메일 등 단순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신용거래와 관계된 금융 정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커 출신 보안전문가 A 씨는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범죄의 표적이 될 돈 많은 사람의 정보를 한 곳에서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유출된 개인 신용정보, 카드 한도 금액 등은 이들이

원하는 최고급 개인정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는 오랜 기간 금융거래를 통해 축적된 ‘신용사회의 신분증’으로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 경우 고소득자들을 상대로 한 표적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2차 피해는 ‘불법 카드 복제’다. 유출 정보를 갖게 된 사람이 카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활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카드를 재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는 “악의를 가진 해커가 이번에 유출된 정보들을 입수한다면 다른 경로를 거쳐 입수한 정보와 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도 있다. 최영록 IT 보안 컨설턴트는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 단 등에 흘러가면 보이스피싱, 스미싱, 온라인 대출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호재 demian@donga.com·문병기 기자

# 피해 확인한다며 비번 입력 요구하면 사기

(비밀번호)

## 사실상 전국민 금융정보 유출... 2차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사상 최악의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에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카드번호, 결제내역, 신용등급까지 민감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다. 현재 유출된 정보만으로 당장 카드를 위조해 물건을 사거나 현금 인출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결제사기)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1 카드 유효기간 유출됐으면 재발급 받는게 안전

Q. 카드가 위조되거나 도용될 가능성은...  
 A. 카드 위·변조나 복제를 위해서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뒷면 숫자 중 마지막 세 자리)이 필요하다. 이번 유출 정보에는 다행히 비밀번호와 CVC값이 포함되지 않아 위조나 현금 불법 인출 같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문제는 롯데·NH농협카드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고객들이 있다는 것. 해외 웹 사이트 중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곳이 많다. 국내에서도 영계 발행점이나 일부 홈쇼핑, 보험판매, 방문판매 거래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불법 사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게 안전하다. 카드사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3개 카드사는 또 실시간으로 카드 결제 내용을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본인 이 쓰지 않은 카드 거래 내용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은행 계좌번호가 유출됐어도 비밀번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을 재발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2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신청하면 명의도용때 문자 통보

Q. 카드 재발급 외의 다른 방법은...  
 A.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카드사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KB국민카드는 전화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신분증과 카드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바꿀 수 있다. 롯데카드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변경할 수 있다.

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신용정보 조회 사실을 고객에게 즉각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의를 도용해 대출 신청이나 카드 발급이 일어날 때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모든 피해 고객에게 무료로 1년간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른 신용평가회사의 사인 나이스도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3 고객 정보 5년 보관... 해지했거나 안 썼어도 정보유출

Q. 카드를 해지했는데 왜 정보가 빠져나갔나.  
 A. 3개 카드사에서 빠져나간 정보는 개인정보로 다르지만 최대 19개월 보관에 이른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직장정보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결제 계좌번호, 연소득, 신용등급, 신용한도, 카드 이용 실적 같은 정보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카드를 오래전 해지했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고객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사는 해지, 탈퇴한 고객의 정보도 통상 5년간 보관하기 때문이다.

특히 KB국민카드 유출 정보에는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해 KB국민카드가 은행 고객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 다만 예금, 대출 등과 관련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카드사들은 고객 신용도 조사나 카드 한도 설정을 위해 다른 업체의 고객정보도 공유하기 때문에 KB국민, 롯데카드에서는 타사 카드 보유 현황과 타사 카드 이용 실적도 유출됐다.

### 4 2012년 10월부터 유출... 사용내용 의심되면 신고를

Q. 예전 카드 결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하나.  
 A. 정보 유출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 시기 이후의 카드 사용 실적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으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 5 보안카드 번호 묻는 메시지, 스미싱으로 봐야

Q.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문자나 이메일이 오는데...  
 A. 고객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별도로 카드사들이 피해 고객에게 유출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이때 각 카드사의 공식 콜센터가 아닌 곳에서 온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을 사칭해 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같은 정보를 빼내려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카드사 사칭 문자나 스마트폰 푸시알림 사제가 적발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1588-1688, 롯데카드는 1588-8100이 공식 번호이며 NH농협카드는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통지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온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링크주소(URL)를 클릭해서는 절대 안 된다.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나 금융정보가 빠져나가는 '스미싱'일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메일에는 URL이 전혀 없다"며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금융회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 6 금전적 피해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가 전액 보상

Q.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면...  
 A. 카드 무단 사용이나 현금 불법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KB국민카드(1899-2900), 롯데카드(1588-8100), NH농협카드(1644-4199)의 피해 접수 콜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 20일부터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가 이를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금전적 피해를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 정보유출감사센터(1332)로 신고하면 된다.

● **도움말 주신 분들** △ 김성근 중앙대 교수 △ 김승주 고려대 교수 △ 김인성 한양대 교수 △ 윤광명 신한테크코리아 이사 △ 이상석 한국IBM 글로벌테크놀로지서비스(GTS) 사업부 대표 △ 최영복 IT보안 컨설턴트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유출정보 조회 방법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현황			
KB국민카드(국민은행 등 계열사도 포함) (kbcard.com)	팝업창 하단 '고객정보 유출 여부 확인' 클릭	정보유출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용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클릭	인증방법 선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유출된 곳	규모	유출 내용
롯데카드 (lottecard.co.kr)	팝업창 중간쯤 '개인별 조회' 클릭	본인 인증 및 인증방법 선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씨티은행	13만 건 (약 13만 명)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액, 대출금리 등
NH농협카드 (card.nonghyup.com)	팝업창 중간쯤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바리하기' 클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클릭	인증방법 선택 (신용카드 휴대전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1억580만 건 (약 1700만 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직장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은행 계좌번호, 대출한도, 연소득, 신용등급, 타사 카드 이용명세 등
<p>개인에 따라 유출된 항목은 모두 다르며 최대 19개월까지 유출될 수 있음. 금융감독원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둘 다 유출된 사례는 KB국민카드의 없으며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만 있다고 밝혔다. 자료: 각 카드사</p>			<p>KB국민은행 등 16개 금융사</p>			<p>127만 건 (65만 명)</p> <p>이름, 전화번호, 직장명 등 (민감한 금융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자료: 한화지진, 금융감독원 등



# ‘좀비家電’ 주의보... 인터넷 TV·냉장고 해킹당해

美서 악성 이메일 루트 된 가전제품 첫 발견... 허술한 보안 큰 문제될 듯

TV와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 대규모 스팸과 피싱 메일을 보낸 사례가 발견됐다. ICT(정보통신기술)가 각 분야로 확대 적용되면서 PC뿐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시대가 열리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다. 해커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가정의 스마트 TV나 냉장고를 ‘좀비 가전’으로 만든 뒤 스팸 메일과 피싱 메일을 보낸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본사를 둔 보안 서비스업체 프루프포인트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홈페이지(proofpoint.com)를 통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 세계에서 75만건의 ‘피싱’과 ‘스팸’ 메일이 TV와 냉장고 등을 통해 발송됐다”고 밝혔다.

프루프포인트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하루 세 차례 10만건씩 발송된 피싱·스팸 메일 공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가정에 설치한 인터넷 라우터(공유기)·TV·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들이 해킹 공격에 사용됐으며 악

성 이메일 중 25% 이상은 랩톱·데스크톱 PC나 모바일 기기가 아닌 가전제품에 의해 발송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커들은 PC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전방위적인 위협을 가했지만, 앞으로는 각 가정의 가전제품이 해커들의 놀이터가 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가전제품이 해킹 공격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PC나 노트북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봇넷(botnet·감염되어 자동으로 악성 메일을 전파하는 좀비PC)’이 된 뒤 대량의 스팸 메일을 발송했다면, 이번에는 가전제품이 감염되어 사이버 공격에 이용된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을 악성 파일에 감염되어 해킹에 이용된 스마트 가전기기를 ‘싱봇(Thingbot·Thing+robot)’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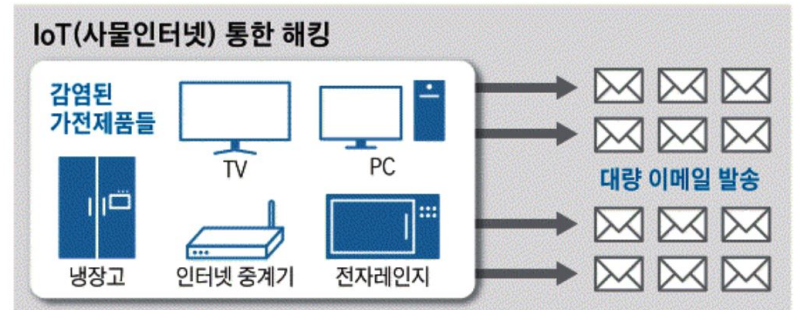
전 세계의 기업과 개인에게 대량의 스팸·피싱 메일을 발송한 이번 해킹 공격은 하나의 인터넷주소(IP)로 보내는 이메일 건수를 최대 10건으로 제한하는 수법을 사용해

➔ **좀비 가전**  
해커들이 PC를 해킹해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심은 뒤 ‘좀비 PC’를 만들어 조종하는 것처럼 해커의 공격에 감염되어 각종 스팸 메일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스마트 가전기기.

##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

TV, 냉장고, CCTV, 헬스케어 제품 등 각종 전자기기들이 부착된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사용자는 여러 가지 기기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

발송 위치를 파악해 공격을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프루프포인트는 “이번 사례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정용 사물인터넷을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문제가 된 스마트 가전기기들은 인터넷 상에서 암호가 풀려 있거나 비밀번호가 초기값인 채 노출돼 있는 등



보안 조치가 허술해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고 말했다.

모든 사물을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IoT 기술은 가전 업계와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올해 가장 주목하는 트렌드 가운데 하나다. 가정용 자동온도조절기·보안카메라·냉장고·전자레인지·TV·게임기 등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가정자동화(Home Automation) 제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가전기기의 수는 최대 20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은 PC에 비해 훨씬 이용빈도가 높고 보안도 취약한 데다가 기 숫자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규모 스팸 메일 발송뿐만 아니라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켜 공공기

관이나 금융회사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에 활용될 우려도 크다.

프루프포인트 데이비드 나이트 매니저는 “가전기기는 PC와 달리 감염이 돼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 일일이 보안 점검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전 세계적으로 유포되는 스팸과 피싱 메일의 건수가 폭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CNN도 19일 “사물인터넷 시대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보안 방식으로는 곧 다가올 사물인터넷 시대의 보안 위협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훈 기자

# 이통3사 스팸문자 차단 4통 중 한통만 걸러내

차단을 52%에서 26%로 반토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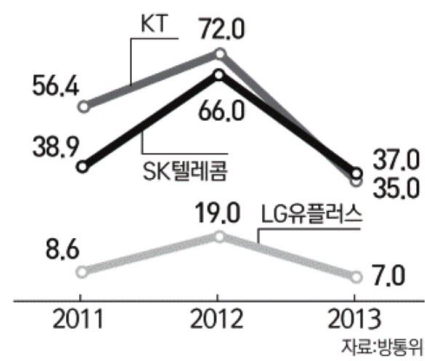
개인정보유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를 악용한 스팸(신종 문자결제사기)·스팸은 날로 지능화되는데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스팸문자 차단율은 반토막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의 지능형 스팸문자 차단율 평균은 2011년 34.6%에서 2012년 52.3%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6.3%로 추락했다. 절반 이상 걸러내던 스팸을 4통 중 한 통만 차단한 셈이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의 차단율이 2012년 66.0%에서 지난해 37.0%로 29%포인트가 하락했다. KT는 같은 기간 72.0%에서 35.0%로 반토막 났고, LG유플러스도 19.0%에서 7.0%로 12.0%포인트가 내려갔다.

스팸 차단율이 급락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특히 스팸이나 스팸의 심각성을 두고 정부와 이통사, 고객간 체감 정도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해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로 받는 스팸문자의 평균 수신 횟수가 하루 0.25통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0.30통, 2012년 0.26통에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다.

회사별로는 KT가 0.26통, LG유플러스 0.22통, SK텔레콤 0.20통의 순이다. 결국 휴대전화 이용자가 하루에 받는 스팸 문자가 한 통도 안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고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 이상이다. 이런 격차는 스팸과 스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반면 정부와 이통사들의 현황 파악과 대응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최근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 저축

이동통신3사 지능형 스팸 평균 차단율 (단위:%)



은행, 캐피탈사에 이어 시중은행까지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팸 차단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강변한다. KT는 최근 '스팸방지 전담팀'을 신설했다. SK텔레콤은 변형된 스팸도 형태소 분석으로 차단하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능을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KISA에 신고된 스팸과 불법 메시지를 자동 업데이트해 차단벽을 높게 쌓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화하는 스팸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 등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스팸문자의 내용은 대출(24.8%)·도박(22.4%)·성인물(18.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스팸은 경찰청 신고기준으로 2012년 하반기 2,182건, 피해액 5억 7,000만원에서 지난해 들어 8월까지 2만 3,090건에 피해액만 44억 4,000만원으로 조사돼 건수는 10배, 액수는 8배나 늘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8월 전면시행 현실성 있나

# 고객 주민번호 전량 파기? 인터넷업계 “사실상 불가능”

오는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업계에 일대 혼란이 우려된다.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올해 8월까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까지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대형포털 외에 대부분 인터넷기업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이후에도 주민번호를 전량 파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19일 관련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엔씨소프트, 웹젠 등은 2012년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맞물려 주민번호 신규 수집 중단은 물론 보유한 회원들의 주민번호도 파기했다. 넥슨, CJ E&M 넷마블, 위메이드 등 다른 메이저 인터넷기업들도 오는 8월까지 주민번호를 전량 파기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상당수 인터넷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B(데이터베이스)내 회원정보 저장방식과 서비스운용 등이 사업자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일괄적인 주민번호 삭제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회원 식별을 위한 기준값으로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 주요 내용**

2012년 8월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전면 금지**

- 대상: 영리 목적 민간 웹사이트
- 계도기간: 6개월

2014년 8월

**보유 중인 주민번호 전량 파기**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 금융거래법 등 법으로 명시된 경우 예외적 허용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중소사업자 DB 외주운영 업종 천차만별·홍보 미비 방통위 “실태조사 나설것”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가상 생성번호 등 다른 식별값으로 전면 대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과 인력투입이 불가피하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폐기 전 서비스별로 주민번호 사용 여부와 다른 식별값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만 반년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번호를 전면 파기하는데 지금 시작해도 8월 이전에 끝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개인쇼핑몰을

비롯한 중소 인터넷사업자들이다. 상당수가 외주업무를 통해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다보니 DB운영 방식과 서비스설계 방식을 모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8월까지 주민번호 순으로 된 DB관리 프로그램 자체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기술전담팀 혹은 전담직원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아예 주민번호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업주도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비상이 걸렸다. 업종과 서비스가 워낙 천차만별이다보니 일괄적인 홍보가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큰 기업들의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해결하지만 중소 인터넷사업자들의 경우 협회와 웹호스팅 대행사업자 중심으로 홍보와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1분기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일부 기술지원비를 제공하면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한다. 주민번호 수집 여부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주민번호 폐기 여부는 사실상 현장조사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시행과 맞물려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워낙 업종과 규모가 다양하다 보니 방법과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연광·홍재의 기자 saint@**

# “ ‘개인정보보호’ 와 상충되는 독소조항 손질 ”

## 잡

오년 첫 회의가 열렸던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장은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10년간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를 합부로 공유해왔던 관행을 개선토록하기 위한 최종 의결을 앞뒀기 때문이다.

15인 소속 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이고 각계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하는 등 장군을 거친 끝에 정하경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렸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기업의 영리와 발전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그간의 관행을 타파하는 결정이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보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개정 권고는 위원회가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발효된 후 부처별, 제도별 '정보보호'와 상충되는 독소조항과 예외 규정들을 시대상황에 맞게 재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에서 사상 최대의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정보 유출로 돈을 벌려는 범죄자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사이버 공격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 위원장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수호 차원에서 정보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어깨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파가 반짝 풀렸던 지난 16일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정하경 위원장을 만났다. 정 위원장은 행정 관료와 특임장관급 차관까지 거친 행정 전문가였지만 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2011년부터는 정보보호 전문가로 명목이 바뀌었다.



정하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역할을 활용과 보호의 두 축면을 가진 도로의 가이드레일에 비유했다.

### 대답 = 이근형 IT정보부국장

“위원회직을 맡은 지도 8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17일부터 상임위원으로 재직해 전문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의 소회를 밝힌다.”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과거 행정안전부 당시 정보화전략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족 이후 초대 상임위원을 거쳐 이번 위원장 직위에 이르기까지 세차례에 걸쳐 담당하고 있다. 상임위원 때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위원장이 되니까 다수 위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조정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절차’에 더 집중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첨단 정보화 사회에 대응되는 현안이며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자부심과 책임을 함께 느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됐다. ‘위원회 출범 당시 위원장과 국회 및 5명의 위원 선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15명 전체 위원회 구성은 2012년 초에야 완성됐다. 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타 부처로부터 전입 받고 업무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발족 초기에는 새로운 조직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러한 중에도 두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고 국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규율의 정보보호법정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등 지난해 말까지 위원회 회의를 총 44차례 개최해 많은 안건을 처리했다. 그간 위원회의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던 것으로 보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중점 추진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단편적인 사안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분야별 다양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려고 한다. 또한 오는 6월에는 개인정보보호 국제기구인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회의에 유치를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언어이 타지는 정보 유출 및 보안사고에도 여전히 기피하고 개인은 이에 무감각한 것 같다. 기업은 개인정보 분야가 특정 부서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개인을 역시 유출에 따른 시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수백만건, 수천만건 하더라도 최근 인의 용기가 사소한 것은 역대 건수에 이르지 못했다.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빅데이터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범위와 과정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스캠 문자와 메일, 스미싱 피해 등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 질서를 교란할 우려도 있다. 이제는 국가 사회 전체의 안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분명히 할 점은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법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규제와 처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다. 법망을 피하는 공격과 유출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바라는 시장 연이 이 문제에도 작동하기를 원한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정보보호 장치에 잘 돼 있는 기업과 우선 거래하게 되면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다. 개인의 권리 의식,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위원회의 집행 기능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등과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다.”

“여전히 개인정보를 두고 ‘활용’과 ‘보호’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제도를 평가한다.”

“아주 어려운 문제고 좋은 지적이다. 지난해 10월31일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 행정부가 마련한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의하면 공공정보를 개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도록 하고 있어 상호 조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활용을 치우치면 보호가 위태롭고 보호를 강화하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 얼마 전 만난 외부 전문가가 개인정보 보호의 역할을 도로의 가이드레일에 비유했다. 국가 경쟁력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그렇다. 이 역시 활용과 보호의 가치가 상충하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하지만 기업도 이제 인식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고객정보는 기업에 상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고객정보를 자산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업일수록 ‘보호’를 규제나 압박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활용’을 위해 당연히 수반해야 할 가치라고 여겨야 한다. 상충이 아니라 함께 수반해야 하는 가치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부분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된다. 고객들이 정보유출로 불안한 회사가 아닌, 내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안전한 회사를 선택하는 기업은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업 역시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경쟁력

을 위한 투자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관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전에 안하던 통의절차 등을 받는 것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위원회 입장에서 무조건 보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특성, 관련 제도의 배경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사회에서도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본다.”

“이번 금융지주회사법도 그걸로 위원회 역할은 ‘권고’ 수준이다. 강제력이 있지 않고 집행기능도 없다.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 타령을 먼저 하고 싶지는 않다. 현재 제도 개선, 정비, 인식전환 등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적지 않다. 일단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서야 정보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개인 가치를 지켜주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준 다음에 관련 확대를 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원회 권고에 관한 실효적인 집행권, 이에 따르는 집행 능력이 있다면 더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컨트론타워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정보보호 정책을 잘 조정해 나가면 된다. 현재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법안(2013년 9월 민주당 법제실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위원회이지만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이 없고 집행기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에서 개인정보의 국제 이전 조약으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수준을 따지는 등 국제통상 문제 그리고 전자정부 세계적 위급 국가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컨트론타워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필요하며 행정 각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것이,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장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보화 사회의 신뢰와 안전의 문제이며 경제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블루오션인 정보보호 산업의 영역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잉보호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보니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투자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 차원의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하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호의 두 축면을 가진 도로의 가이드레일에 비유했다.”

## “ 개인 권리의식·기업 정보보호 ‘선순환’ 필요 정보개방 ‘활용’과 ‘보호’ 상호 조화 이뤄야 부처간 정책 조정 ‘컨트론타워’ 역할 다할것 ”

위해 정보의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가 그 소통을 막거나 감속시키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고 제도 이점을 막아주는 가이드레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이드레일이 튼튼할수록 인식하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예기인데, 무척 공감이었다.”

“최근 금융위에 개정을 권고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처럼 시대적 흐름과 정보기기의 변화에 따라 손질해야 하는 법제도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물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발효되면서 부처별, 산업별로 가지고 있는 각종 개별법, 특별법, 예외조항 등이 일반법과 충돌하거나 모순이 되는 부분이 적잖다.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분야별로 특별법이 존재하고 소관 부처가 달라 정책 충돌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일부 예외조항이나 특례에 따라 보호보다는 ‘활용’에 더 가치를 둔 법률이나 정책이 요소요소

에 자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보호와 활용은 참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이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국민의 정서가 개인정보를 정보라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위원회가 이같은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고 싶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권고에 대해 벌써부터 일부 금융기관들이 불만을 하고 있다. 이렇듯 제도 개선과정은 산업계 반발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 하 경 위원장은...

출생 1957년 8월24일 서울 출생

학력 1976년 경성고등학교 졸업 1980년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학사 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1989년 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Indiana Univ., Bloomington) 행정학 석사

경력 1980년 총무처 수습사무관(행시 22회) 1981년 총무처 인사과 1989년 총무처 기획관리실 1994년 총무처 조직과 제도2과장 1997년 총무처 인사과 인사기획과장 1999년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과장 2002년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인사정책심사관 2006년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 고위공무원지원과장 2008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실장 2009년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2009년 특임장관급 차관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2013년 5월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정하경@kpi.go.kr

# 국회, 휴대폰 감청 ‘허용할까’ ‘제한할까’

## 여야, 다른 법안으로 입법경쟁 국가안보 vs 국민기본권 대립

휴대폰 감청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2세대 CDMA폰에서의 도청 논란이 LTE 시대에서 재현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보다 쉽게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감청 남용 방지 법안을 내놨다. 민주당까지 나서 새누리당 움직임에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등 범야권 진영은 경계의 눈초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회사들이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안이 골자다. 서 의원 법안은 국가 안보에 방점을 뒀다.

반면에 송호창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한층 더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감청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했다. 예컨대 현행법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에도 검사가 법원에 감청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각 피의자’로 축소했다. 또 횡수 제한 없는 감청을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최대 6개월 안에 혐의를 파악, 기소하지 못하면 감청을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이 수사를 위해 파악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가운데 인터넷 접속지역, 휴대폰 기지국 위치 등을 별도의 ‘위치정보 추적자료’로 분리해 엄격한 관리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통신사 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가 포함돼 있다.

송호창 의원 측은 “어린이 유괴 등 급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감청이 필요하다”며 “다만 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통신회사의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도 상반된 입장이다.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사에 감청 필요장비 구비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에 송호창 의원 발의안은 통신회사 직원이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감청 집행이 영장의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의의와 성과’ 한글파일 열지마세요

# 정부 경고에도 北 추정 해킹 또 포착

정부가 북한 해킹메일 주의보를 내렸지만 또 다시 동일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시도가 발견됐다.

19일 국내 보안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글 문서(hwp)로 위장한 악성파일이 발견됐다. 이메일에 첨부돼 유포된 이 파일은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의의와 성과’라는 제목을 사용했다.

해당 문서를 열면 지난해 11월 있었던 유럽 순방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보이지만 열람과 동시에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된다.

이 악성코드는 컴퓨터의 정보와 키보드 사용 내용 등을 수집·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되는 파일과 파일 구성 등이 기존 북한의 수법과 일치한다는 게 복수의 전문가 분석이다.

임카인터넷에 따르면 악성코드 제작 시점은 지난 12~14일 전후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 해킹 메일이 유포된 시점은 14~15일께로 추정된다. 안보와 관련된 기관에 이 메일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북한 해킹메일을 경고한 시점과 거의 일치해 주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북한 해킹조직이 한글문서로 위장한 해킹 메일을 다량 유포해 자료 절취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안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정부의 주의에도 시도가 이어져 북한의 해킹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편 순천향대 SCH사이버보안연구센터는 북한의 소행으로 알려진 7·7 디도스, 3·4 디도스, 농협 전산망 마비 등에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악성코드는 공격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로, 좀비PC를 확보하려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됐다.

센터장 염흥열 교수는 “이번 악성코드가 단순히 좀비PC 집단(봇넷)을 구축하는데 그칠지, 아니면 사이버 테러로 발전할지는 미지수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 A씨는 2013년 4월 휴대폰 소액결제완료 통보 문자를 받았다. 통보 후 이동통신사사이트의 청구서를 본 결과 소액결제서비스로 매월 1만6500원이 결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동통신사, PG(결제대행업체)사의 결제 내역을 확인했더니 무000라는 사이트에서 결제된 것이었다. 방문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결제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5월~2013년 3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6만5000원이 지불됐다.

## ‘눈 뜨고도 당한’ 소액 자동결제

### 사기수법 지능화... 몰래 돈 빼내 ‘속수무책’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 피해상담 3배 급증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피해 중 소액결제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의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5월 686건을 기록했던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상담 건수가 2013년 5월 1438건으로 일 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는 같은기간에 262건에서 759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 게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최근 해킹, 스미싱 등 전자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2013년 5월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모바일 정보이용 서비스의 경우, 759건 중 600여 건 이상이 부당 소액결제 관련 상담이었고, 인터넷 정보이용 서비스는 1438건 가운데 76%가 소액결제와 관련된 상담일 정도로 소액결제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2011년부터 2013년 7월까지 피해구제 건수의 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의 이용 및 사이트 방문가 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결제된

경우가 전체 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동안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가 되는 피해사례가 168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결제와 무료 이벤트로 가입했으나 소액결제가 된 소비자 피해가 16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성별로 보면, 전체 건수 중 남성의 피해가 1199건으로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다. 연령별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30대가 549건, 전체 34%으로 가장 피해가 많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20대는 24%, 40대는 19%순으로 나타났다.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자동결제 등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 구글에게 국내 통신 사용자란... 공짜 먹잇감?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구글이 국내 통신사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설치한 '구글 글로벌 캐시(GGC)' 서버로 우리나라 통신 가입자의 사용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동영상 광고를 내보내 거액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고위관계자는 19일 "구글이 일부 통신사 IDC에 공짜로 GGC를 집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상당한 양의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 국내 광고시장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시 서버는 자주 조회되는 콘텐츠를 원거리의 데이터센터 대신 저장해 사용자의 접속 단계를 줄여 속도를 높이는 콘텐츠전송망(CDN) 인프라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LG유플러스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2년 2월부터 구글 GGC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만 유일하게 자사 IDC에 GGC를 도입하지 않았다.

통신사 자산인 IDC에 서버를 넣으려면 일정한 물리적 공간과 전력 등 인프라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라면 구글이 통신사에 IDC 사용비를 내야 한다. 실제로 많은 국내 중소 콘텐츠제공업체(CP)는 비용을 지불하고 통신사 IDC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공짜로 이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사용자 정보까지 얻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국내 통신사가 '인터넷 속도'를 핵심 경쟁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 70% 이상을 점유한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나 80%를

통신사 IDC에 자사 캐시 서버 서버 심어 광범위한 '가입자 정보 빼가기' 의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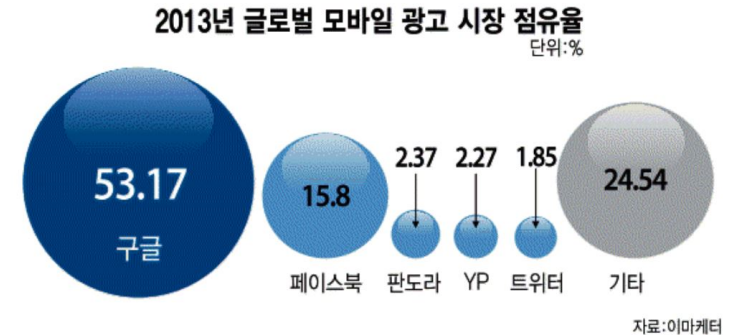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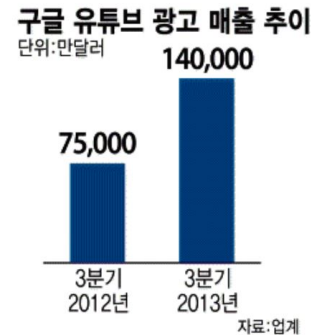
업계 속도 경쟁 덕에 '무료로 입주' 유튜브 등 접속 단계 줄였지만 '맞춤형 광고에 이용정보 활용' 논란

넘겨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플레이 스토어'를 빠른 속도로 제공하는 것이 네트워크 품질의 지표처럼 여겨진다. 통신사 관계자는 "사용자가 LTE 속도 경쟁력을 인지하는 핵심 콘텐츠가 동영상이나 콘텐츠 다운로드"라며 "국내 인터넷 동영상 시장의 70% 이상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구글의 GGC 도입은 통신사에도 유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유튜브 동영상을 빠르게 이용하는 대신 이들의 이용정보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조회 수가 30만건 이상 되는 유튜브 동영상 대부분에 맞춤형 '트루뷰(true view)' 광고가 붙는다"며 "국내 동영상 광고 수요를 상당 부분 빨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의 동영상 광고 규모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은 14억달러(1조4841억원)로 전년 대비 87% 늘어났다. 국내 매출은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유튜브 덕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조사 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광고 역시 구글이 전 세계 시장의 53%를 장악하며 2위 페이스북(15.8%)을 크게 앞섰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 문제는 수집·활용 주체인 구글과 사용자 간의 문제며 IDC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관련

이 없다"며 "IDC 무상 제공은 구글 요청을 들어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구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 수집은 국내외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스트리트뷰' 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 美 ‘감청중단’ 정상은 누구?... 의문키운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국가안보국(NSA)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신화 뉴스

**국가안보국 개혁 방안 발표**  
“친구-동맹국 제외”... 대상은 안밝혀  
내주 외교채널 통해 한국에 설명  
테러 방지-정보보호 사이 고심 흔적  
EU “환영”... 어산지는 강력 비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국가안보국(NSA)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동맹국 등 해외 정상 수십 명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전화 통화기록 분석 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하지만 정보기관들이 영장 없이 ‘국가안보문서’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과 인터넷 서비스 회사 등에 대한 암호체계 무력화 프로그램을 제한하라는 민간 자문단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미흡한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미국)와 가깝게 일했고 그들의 협조에 우리가 의존해 온 외국 정상들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로 취급받을 것이라는 점도 믿어 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미 (정상) 수십 명의 감청 활동이 중단됐다”고 미국 언론에 말했다. 미국은 다음 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국 도청 의혹에 대한 유감 표시이자 한국 대통령도 감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독일TV ZDF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소통과 신뢰를 방해할 수 있는 감시 매커니즘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내가 미국의 대통령인 한 독일 총리는 (감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처럼 미 정보기관도 각국 정부의 의도에 계속 관심을 둘 것이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6월 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관행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지 7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직면한 테러의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해외 정상 감청과 함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미국인 전화통화 ‘메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는 상당한 제한을 뒀다. 개혁안은 NSA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화기록 수집 및 분석 전에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예전에는 해외 테러

용의자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되는 단계가 3단계까지였지만 2단계로 줄였다.

NSA가 그동안 수집한 통화기록 저장도 민간에 넘어간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정보기관장들에게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위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NSA를 관장하는 비밀 해외정보감시 법원에 개인 사생활 보호를 담당하는 공익변호사가 배치되고 외국인에 대한 사생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문서’ 대신 법원 영장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나 휴대전화 서비스회사 등 민간 기업에서 고객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자문단의 건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이나 야후 등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전산망에 뒤틀문으로 들어가 정보를 캐내는 암호 무력화 기술 등에 대한 규제 요구도 묵살됐다.

이 때문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성명을 통해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은 옳은 방향으로 한발 내디딘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폭로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는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도 고심의 흔적은 있지만 범위는 매우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국(NSA) 개혁안 개요**  
자료: 워싱턴포스트

**즉시 시행 항목**

- 외국 정상 ‘수십 명’에 대한 도청 중단
- 미국인 통화기록 수집 및 분석 때 법원 승인 의무화

**추후 검토 대상**

- 전화 통화기록 데이터 보관을 민간에 넘김
- 비밀 해외정보감시 법원에 사생활 보호 공익변호사 배치
- 외국인 정보 감시 완화 및 사생활 보호

**언급되지 않은 방안**

- 국가안보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때 법원 사전 승인
- 인터넷 서비스 회사 등에 대한 암호 무력화 기술 등 규제

삼성 스마트폰 - LG 로봇청소기, 美 - 유럽서 잇따라 호평

# “갤S4, 모두를 위한 만능폰”

〈The everything phone for everyone〉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4’(사진)가 미국 정보기술(IT) 전문지 ‘시넷(CNET)’의 제품 평가 순위인 ‘시넷 100’ 1월 랭킹에서 1위에 올랐다. 시넷은 IT, 모바일, TV 등 전자제품을 통틀어 편집인과 외부 평가를 종합해 매달 ‘시넷 100’ 순위를 발표한다.

시넷은 갤럭시S4를 “모두를 위한 만능폰(The everything phone for everyone)”이라고 평가했다. 장점으로는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강력한 쿼드코어 프로세서(구동 속도를 빠르게 해줌), 카메라 기능, TV·DVR 리모컨 기능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꼽혔다. 반면 경쟁사 제품에 비해 어두운 화



美 IT전문지 ‘시넷’ 선정  
1월 전자제품 랭킹 1위

면과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디자인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갤럭시 노트3’도 4위에 올라 삼성전자는 ‘톱 10’ 리스트에 이름을 두 차례 올렸다.

시넷은 갤럭시 노트3에 대해 “훌륭하고 큰 화면, 놀라운 성능의 프로세서, 정교한 ‘S펜’을 갖춘 제품”이라며 “장시간 유지되는 배터리 성능, 우수한 통화 품질과 카메라 기능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단점으로는 비싼 가격과 커다란 사이즈,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인조 가죽 디자인을 꼽았다.

2위에는 구글 넥서스7 태블릿PC, 3위에는 파나소닉의 TV ‘TC-PST60’이 각각 선정됐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한국경제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A17면 종합

# 美스마트폰 시장 애플·삼성 천하

4분기 시장 점유율 68%  
NPD 그룹 보고서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독식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10대 중 7대는 삼성전자나 애플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현지시간) 시장조사기관 NPD 그룹의 ‘커넥티드 홈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6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NPD는 이번 조사를 위해 미국 스마트폰 이용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애플의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42%로, 전년 동기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5s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는 같은 기간 26%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4%포인트 늘어났지만 선두인 애플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는 선전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의 점유율은 급락하는 추세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 기간에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한 주요 업체는 LG전자가 유일하다.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다. 모토로라 HTC 블랙베리 등의 점유율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에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전체 휴대폰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서 60%로 상승했다. NPD 측은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대부분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안드로이드 폰을 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성미기자 smshim@hankyung.com

# 2020년 세계 웨어러블기기 점유율 40% 목표

## 정부, 차세대 디바이스 전략 마련 창업 활성화해 기업 100곳 육성 국내 생산비중 절반 달성 목표

정부가 2020년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세계 점유율 4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세대 디바이스 코리아 2020' 전략을 마련했다. 2020년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40% △디바이스 관련 창업기업 100개 △차세대 디바이스 국내 생산 비중 50%를 달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단말, 모듈 등 정보기기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취지다.

우선 융합센서, 무선전력전송, 차세대 사용자환경/사용자경험(UI/UX) 등에서 미래 전략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웨어러블, 헬스케어에 적용될 기반 기술을 육성한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다중대역 FEM(front-end-module), 초전력증폭기, 무선(RF)칩세트 등의 분야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정책은 중소기업에 맞춘다. 연간 5~10개 과제를 선정해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중소·벤처 맞춤형 사업 지원체계인 '창의 디바이스 랩(Lab)'도 2015년부터 운영해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한다.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지원하는 '스마트 디바이스 팩토리'를 구축해 기본 제조 기계와 도구(밀링머신, 선반, 용접기, 드릴프레스), 3D프린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

다.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대학IT연구센터(ITRC)와 차세대 디바이스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디바이스 특화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통섭 인력을 배출한다. 전자, 화학, 디자인, 인문 등 다양한 전공자를 선발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핵심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주요 부품을 국산화해 디바이스 강국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감, 지능, 융합형 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할 글로벌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통신사업자로 공이 넘어 온 망 중립성

신화수 칼럼

논설실장 hsshin@etnews.com

망 중립성 논쟁이 통신사업자쪽으로 기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이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효력이 없다며 통신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통신사업자는 망을 과다하게 쓰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업체에 대가를 청구할 근거를 확보했다.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콘텐츠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콘텐츠업체가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을 명분으로 주창했다. 속내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 투자비 부담 요구 회피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FCC를 움직여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 규제를 만들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엄밀히 말하면 망 중립성보다 FCC 규제 권한이 타격을 받았다. 법원은 정보서비스사업자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공중통신사업자(커먼 캐리어)에나 가능한 규제를 강요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FCC 선택은 다시 소송해 판결을 뒤집거나 ISP를 커먼 캐리어로 지정하는 것이다. 둘 다 여의치 않다. 10년 전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바꾼 게 FCC이었기 때문이

다. 당시 통신사업자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독려한 결정이다. FCC가 결국 열린 인터넷 규칙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그나마 인정한 '투명한 망 관리'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앞서간다. 유·무선 통신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까지 기간통신사업이다. 정부가 망 중립성 규제 권한을 이미 확보한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엔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을 담은 기준을 내놓았다. 통신사업자 트래픽 관리를 합리적인 범위 안으로 제한하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올해 말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작 핵심인 트래픽 투자비용 부담 사안을 건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접근 방식은 다르다. 망 중립성 일괄 적용을 보류했다. 트래픽 추이, 시장 경쟁을 두루 판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업체간 발생 수익 또는 투자비용을 나누는 새로운 망 중립성 해석도 나왔다. 미국 법원 판결까지 더해 망 중립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콘텐츠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수익 분배든, 투자비용 부담이든 쉽지 않은 일이다. 딱 떨어지게 정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근본적 해결책은 있다. 종량제다. 인터넷을 많이 쓴 사용자가 비용을 더 많이 내는 제도다. 문제는 사용자 저항이다. 그런데 콘텐츠사업자가 투자비용을 부담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전가할 게 뻔하다. 그것도 일률적이다. 이럴 바엔 사용량에 따라 적용하는 종량제가 훨씬 합리적인 대안이다.

종량제는 이미 부분 도입됐다. 데이터용량 별로 다른 스마트폰 요금제가 대표적이다. 이 요금제를 더 세분화하는 동시에 음성보다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유선 인터넷도 정액제를 기반으로 일정 데이터 사용량을 넘으면 추가 과금하는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

요금제가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시장 상황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다. 사실상 지역별 독점사업자 체제인 미국과 달리 우리 유선 인터넷 시장은 거의 자유경쟁 체제다. 무선 인터넷엔 와이파이라는 대안까지 있다. 통신사업자가 소비자가 외면할 비싼 요금제를 마구 도입할 수 없다.

망 중립성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공은 통신사업자로 넘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이고 콘텐츠사업자까지 달랠 요금제 해법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정부가 요금 규제라도 누그러뜨리면 묘안 찾기가 한결 쉬워진다.

## 데스크칼럼

현재는 이동통신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200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5개나 되는 이동통신사가 존재했었다. 국내 최초로 이동시대를 연 SK텔레콤을 필두로 2위 사업자인 신세계통신, 그리고 90년대 중반 PCS(개인 휴대통신)사업자로 출발한 KT프리텔(현 KT),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 한솔텔레콤에 이르기까지 5개 사업자가 생존경쟁에 나서던 때가 있었다.

협소한 시장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생존게임에 노출되다 보니, 당시에도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시장을, 특히 단말기 업체들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세계 톱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초석이 됐다.

그러나 IMF 파고와 2000년대 대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기를 지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대변혁기를 맞는다. 2001년 3위 사업자인 한국통신프리텔이 5위 사업자인 한솔엡닷컴과 전격적으로 합병한데 이어, 2002년 새해 벽두에는 1

리가 최근 LTE 시장에서 앞치락뒤치락 하며 치열한 2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황금분할 구도는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신3강에 의한 황금분할 구도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제4 이동통신사는 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신규 사업자 유인을 통해 시장에 큰 변화를 주기 보다는 통신 3사간 공정경쟁과 투자확대 쪽에 맞춰지면서 제4 이동통신사 허가문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구 방통위시절, 중견 벤처기업들로 구성된 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제4 이동통신사 허가를 신청하면서 처음 이슈화됐지만, 이마저도 네 번 모두 탈락하면서 오히려 기대감을 떨어뜨렸다.

제4 이동통신에 대한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우선, 제4 이동통신을 추진하는 대부분이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확실한 재무적 투자자가 없다는 점은 큰 결격사유로 지적되고 있다. 통신공통 3사가 연간 수조원



최 경 섭  
정보미디어부장

## 황금분할 구도와 제4 이동통신

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역시 경쟁사인 신세계통신을 인수하는 초대형 빅딜이 성사됐다. 당시, SK텔레콤과 신세계통신간 합병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당시 정부는 국내 이동통신도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한다는 명분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유무선 빅딜을 거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강 구도로 재편됐다. 이동 3강 구도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구조를 5:3:2로 고착화시키는 전기가 됐다.

전문가들은 5:3:2의 시장 점유율 구조가 적당한 경쟁과 균형, 또 투자유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이른바 '황금분할'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줬다.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은 2000년대 초 대형 빅딜 이후, 10여년이 넘도록 황금분할 시대를 이어오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여전히 시장의 절반 이상을 과점하면서 독과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과 절제의 선을 유지하고 있다.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

래의 돈을 투자해 치열한 '썬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권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버터내기 힘들 것이라 비관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시 제4 이동통신 선점작업에 착수한다. 구 방통위 시절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동안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으로 여겨졌던 2.5㎓ 대역을 와이브로는 물론 경쟁기술인 LTE-TDD로 허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특히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로 채택하고 있는 LTE-TDD를 수용키로 하면서, 서비스 업계는 물론 단말기, 장비업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부도 과거와 달리 제4 이동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10여년 넘게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제4 이동통신이라는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LTE-TDD 생태계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제4 이동통신 도전에 나서는 사업자, 정부, 그리고 이동통신 생태계에 있는 구성원들에 기대를 걸어본다.



### 나는 ‘스팸’ 기는 ‘정부통계’

기자의 눈 권대경 기자 <정보산업부>

“대출·대리운전 스팸만 하루에 4~5통이 넘는데 0.25통이라니 어 처구니가 없네요.” “이름·주소·주민번호·연봉 등 온갖 정보가 유출됐다는데 앞으로는 훨씬 똑똑한 스팸 폭탄이 쏟아지겠네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스마트폰 등 휴대폰으로 받는 스팸문자가 하루 평균 0.25통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KB국민·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외부유출은 차단된 것으로 추정했다. 스팸·스미싱으로 악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결국 “안심하라”는 말이다. 그러나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하다.

방통위 계산법으로는 나홀로 한 통 스팸을 받아야 한다. 여가다 이

통사들은 각종 차단 서비스와 장치를 통해 많이 걸러낸다고 말한다. 모 이통사는 자체 테스트에서 스팸 차단율을 80% 이상으로 높였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실제 이통3사의 스팸문자 차단율은 톱 떨어졌다. 신종 스팸과 스미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이통사, 휴대폰 제조사들이 날로 진화하는 스팸의 뒤편 무니만 따라다니고 있다. ‘열 경찰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휴대폰 제조사나 이통사들이 스팸·스미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는 소비자들과 점점 멀어지는 현실인식이다. 실상에 대한 파악은 실태조사에서 시작된다. 0.25통으로 줄어든 실태조사 결과가 더

벌어진 격차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최근 카드사·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잇따라 유출됐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불안하다. 유출 건수만 보면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거리에 굴러다니는 셈이다. 대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고 금고열쇠까지 맡긴 셈이다. 각종 개인정보를 인질로 삼은 스팸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업계의 현실감 떨어지는 상황인식과 대처는 2차, 3차 범죄로 이어진다. 진정한 정보화 시대는 빠른 속도와 풍부한 콘텐츠에 앞서 안전한 이용을 전제로 한다. 액셀러레이터에 앞서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보다 치밀한 조사를 통해 현실감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업계는 사용자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실성 떨어지는 조사와 대응책으로는 스팸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kwon@sed.co.kr

## KBS의 수신료 인상 ‘말장난’



정세근  
충북대 교수·철학

기고

방학이 되면 하는 일이 있다. 소설을 쌓아놓고 보는 것이다. 이번 연말만 하더라도 일이 밀려 새벽과 함께한 두 달이었다. 저녁에는 술 먹고, 새벽에는 차마시고, 이제는 글 빛이 대강 마무리되면서 드디어 소설을 잡았다.

저번 방학 때 읽은 것은 하루키의 <1Q84>였다. 일본어로는 ‘Q’나 ‘9’나 발음이 같으니 말장난을 한 것인데, 1984년과는 다른 새로운 1984년이기도 하며 조지 오웰의 소설제목을 패러디한 것이기도 하다. 빅 브라더 대신 리틀 피플을 등장시키고 이 세계와는 다른 평행의 세계를 중첩시키면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1, 2권까지는 그런대로 재밌게 읽었는데, 3권에 이르

러서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지루했다. 끝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섬세한 감정의 표현이나 기묘한 비유에 매달리면서 마무리했다.

<1Q84>에는 전편을 가로지르는 NHK 수금원 이야기가 나온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수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어린 주인공을 데리고 다녔다. 주인공은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다. 회상의 고리는 이랬다. 아버지는 NHK 수금원이고, 나는 그것이 부끄러웠고,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녀가 좋았다. (소설에서는 ‘나’도 ‘그녀’도 모두 3인칭이지만.) 일본사람들도 NHK 수금원에게는 학을 떼는 모양이다.

소설 후반부에서도 그의 아버지가 아닌 데도 NHK 수금원의 역할이 계속 이어진다. 사람을 죽이고 숨어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도 NHK 수금원은 찾아온다. 일본 전역에 유명처럼 모든 집을 방문하는 공인된 인물이 바로 NHK 수금원이었다. ‘돈을 내란 말이야,

나는 네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NHK 수금원은 문을 두드리며 늘 공갈과 협박을 해댄다. 숨어있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그랬다. 요즘 대학생은 ‘KBS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이라는 것을 모른다. KBS 수신료라는 것조차 잘 모른다. 전에는 KBS에 광고가 없었다. 대신 매가구가 수신료라는 것을 내야 했다. 그것을 내지 않으려고 TV를 숨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수금원은 모든 집을 찾아와서 수신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KBS가 지나치게 군사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못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것이 수신료 거부로 이어진 것이다. 대대적인 호응을 얻었다. 일단 돈을 안 내니까 좋았고, KBS도 그렇지만 수금원도 미웠다. 하루키 소설을 보면서 과거 KBS의 수신료 수금형태가 NHK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KBS가 2014년부터 수신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나섰다. 뉴스 내내 현실화를 떠드는데 얼마라고는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얼마인지 물어보니 사람들이 1000원이 넘는다는데, 찾아보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대폭 인상이다. 수금원도 없이 전기료에 자동 포함되니 안 낼 수도 없다. (과거 거부운동의 이상한 결과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인상’이라고 하면 될 것을 ‘현실화’라고 말장난을 꼭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얼마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적 저항이 걱정되는지 액수는 말하지 않는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되는가? 광고는 광고대로 하면서도 수신료도 받아야 하는지?

나도 욕망을 ‘현실화’하고 싶다. 부인도 ‘현실화’하고 싶다. 음주가무도 ‘현실화’하고 싶다. 내 용돈도 ‘현실화’하고 싶다. 내 식사도 ‘현실화’하고 싶다. 마침내 2014년을 ‘현실화’하고 싶다. 하루키가 웃을 일이다.

## ‘세계 정보전쟁은 현실’ 인식 아래 도청에 대비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지도자에 대한 감청을 중단한다는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을 어제 발표했다. NSA 하청 컨설팅업체 직원이었다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이 테러 용의자는 물론 세계 35개 정상들을 불법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지 7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이유가 없는 한,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통신 내용을 감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NSA의 불법 감청에 발끈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NSA 감청에 놀라는 척했던 일부 국가들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e메일을 엿보는 프로그램을 강화했다”며 “외국 정부에 대한 감청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불법 감청을 사과하는 대신 ‘이중 잣대’를 지적한 셈이다.

NSA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유럽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였다”고 성명을 냈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NSA의 근본적인 개혁이 빠진 점에 대해 비판적이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

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는 CNN 인터뷰에서 “메르켈 총리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감시하지 않겠다고 하지 만 그들이 대화하는 상대는 감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한국도 2007년 주요 정보 수집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1월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기밀문서를 근거로 보도했다. 미국은 다음 주 외교 채널을 통해 도청 의혹에 유감을 표하고 한국 대통령도 감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치 않다.

주요 국가들은 테러 마약거래 군사분쟁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은 동맹국 정상의 대화를 더는 엿듣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도 그러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의 치열한 정보전쟁을 현실로 인정하고, 정부는 외국의 스파이 활동에 맞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는 게 최선이다. 우리의 국익을 넘보는 건 북한만이 아니다.

## 중요일보

## 금융사, 범인에 열쇠 내줘 고객정보 유출했다니...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양이 엄청난 데다 민감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무려 1억400만 명 분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결제계좌와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등 최대 19가지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갔다고 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신상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털린 셈이다. 피해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더구나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 보유자뿐만 아니라 탈퇴자나 거래 상대방, 계열 은행 고객의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해당 신용카드사들은 비밀번호와 cvc(카드유효성검사코드)는 유출되지 않아 위변조나 복제를 통한 자금유출 피해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킬 수는 없다. 해외 사용을 통한 불법자금결제 등 만일의 피해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

보고, 이를 피해고객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 또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이나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몰래 침입한 것이 아니라 접근권한을 가진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판매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것이다. 개인정보를 노린 해커가 뒷문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금융사가 범인에게 열쇠를 주어 정문으로 버젓이 걸어들어와 개인정보를 들고 나간 것이다. 금고를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로 잠가도 범죄자에게 열쇠를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금융사들은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만일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고객의 정보를 털린 금융회사는 금융의 생명인 신뢰도 털린 것이다.

## 과태료 600만원서 끝내니 금융 고객 정보 계속 털린다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억40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 은행 계좌 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빠져나간 고객 정보는 고객 휴대전화와 직장·주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카드 결제 계좌, 신용 등급 등 최대 21개 항목에 이른다. 피해자도 금융 감독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회사 고객 정보를 빼내가는 범행은 해킹을 통한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금융회사 내부 직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범행이 많아졌다. KB국민·농협·롯데카드도 보안 시스템 개발을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냈다. 고객 정보를 지키려면 신상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고 휴대용 저장 장치(USB)에 다운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USB에 담아 빼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카드 회사들의 무신경을 보여준다.

금융 당국은 범인들이 곧바로 검거됐고 카드 비밀 번호도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낱알이 노출된 데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교체 발급, 은행 계좌 변경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한국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고객 정보 14만건이 빠져나간 것을 비롯, 금융회사들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감독 당국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기관주의' 경고장 하나 보내고 과태료를 최대 600만원 부과하는 선(線)에서 처벌하는 척 시늉만 해온 탓이 크다. 사장을 문책할 수도 있다고 말로만 엄포를 놓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

### 한겨레

## '무차별 정보수집' 계속하겠다는 미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안보국(NSA) 개혁안은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구촌의 우려를 가라앉히기에는 미흡하다. 앞으로 의회 논의 과정 등에서 좀더 확실한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의 감청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에 대한 감청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감청 대상을 정할 때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인터넷 사용 기록과 전자우편을 뒤지는 온라인 데이터 감시는 계속된다. 개인 통화 기록인 '메타데이터' 수집도 마찬가지다. 수집된 정보를 국가안보국이 아닌 민간 기구에 보관하는 개선책을 내놨을 뿐이다.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이 직접 해온 국가안보국 요직에 민간인을 앉혀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조직 개혁안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안보국의 직원이었다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해 봄부터 이 기관의 불법 도·감청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한 이후 이 기관의 개혁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

가 됐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관의 활동과 관련해 진지하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이번 연설에서도 개혁안보다는 이 기관의 활동을 옹호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뒀다. 중국과 러시아를 예로 들며 사생활 보호 문제 등에서 이 기관의 활동이 앞서간다고 하기도 했다. 그나마 개혁안 내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표현이 모호한데다 곳곳에 예외를 두고 있어 '무차별 정보수집'이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가까운 친구나 동맹국 정상'이 누군지도 분명하지 않다.

국가안보국 개혁에 소극적인 미국 정부의 태도는 안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와 정보기관 역량에 대한 과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개혁을 늦출수록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에는 국가안보국이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감청해왔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미국이 철저한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외교력을 행사하기 바란다.

## 사설

모바일 생태계가 꼬여가고 있다. 생태계의 근원,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대접이 너무 박하다. 개발의지가 꺾이면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고, 생태계는 다양성을 잃고 금세 부실해진다. 이래선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 그 중심인 콘텐츠 산업의 꽃을 피울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 취재결과, 스마트폰 시대에 콘텐츠 개발사가 모바일 생태계 안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OS와 앱장터, 통신망, 채널링 플랫폼, 배급망을 장악한 거대 사업자들이 수익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카카오톡 게임하기 플랫폼을 거쳐 앱장터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을 받아 유료결제를 할 경우 매출의 30%를 구글이 가져가고,

피쳐폰 시대에 없던 OS진영이 생겼고 게임을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카카오 같은 울트라 플랫폼도 등장했다. 푹푹한 게임 발굴해 성공적으로 론칭시켜 주는 연예 매니지먼트 같은 배급사도 역할이 커졌다. 이 모두가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모바일 생태계를 키운 장본인들이다.

물론 근간은 피쳐폰 시절에도 중심축이었던 이통사업자와 개발사다. 두 참여자가 없다면 모바일 생태계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콘텐츠 개발사에 대해서는 너무 푸대접이다. 수익 배분율이 너무 줄었다. 이들은 85%를 챙겨가던 것에서 지금 20%도 챙겨가지 못하고 있다. 60% 가량을 새로 등장한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주고 있다. 그들간의 합의에

## 모바일생태계 선순환구조 아직 멀었다

구글은 다시 이 매출의 90% 가량을 이통사에 준다. 카카오는 전체의 21%를 가져간다. 나머지 49% 중 게임 운영 및 서비스, 마케팅을 전담하는 배급사가 60%를, 개발사가 40%를 챙긴다. 결국 전체 매출 중 구글이 3%, 이동통신사가 27%, 카카오가 21%, 배급사가 29.4%를 가져가고, 최종적으로 개발사는 19.6%를 배분 받는 구조다.

개발사 수익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모바일 생태계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이 많아진 게 가장 큰 이유다. 과거 일반 휴대폰(피쳐폰) 시절에도 모바일 게임은 있었다. 하지만 이 때는 생태계 관여자가 이통사와 게임개발사, 추가하자면 솔루션개발사 정도가 전부였다. 이 때 게임 개발사의 몫은 평균 85%에 달했다. 모바일 게임 개발할 만했던 시절이었고, 그 때의 개발 경쟁력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도 이어져 모바일 게임 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생태계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이 늘어 난 것을 나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매우 고무적이다.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의 창출이기 때문이다.

따라 적절한 배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분할 구도가 어딘지 감자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각 진영 모두 할말은 많다. 이통사는 3G에서 4G로 진화시키는데 수조원을 투입했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키우는데 크게 공헌했다. 카카오 특이 없었다면 게임 개발사나 배급사가 편리하게 게임을 론칭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배급사는 게임개발사가 개발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흥행을 대행해준다. 이렇게 보면 그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고 제몫을 주장할 근거도 있다.

하지만 개발사의 몫이 20% 수준이라는 것은 씁쓸함마저 준다. 모바일 생태계의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창조자가 슈퍼 갑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노예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바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은 개발한 창조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사

◇금융위원회 <전보> ▽과장급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김홍식 △행정인사 김경각 △정책홍보팀장 이수영 △산업금융 이행주 △구조조정지원팀장 선욱 △글로벌금융 탁운성 △보현 김진홍 △서민금융 최용호 △자본시장 이명순 △자산운용 안창국 △공정시장 김기한 △자본시장조사담당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변영한 △ 기획협력팀장 최명수 △ 제도운영 이태훈

◇경찰청 <총경 전보> ▽본청 △홍보담당관 유충호 △기획조정 진교훈 △재정 김교태 △규제개혁법무 서연식 △감찰 유진형 △감사 최관호 △인권보호 손장목 △정보화장비기획 김중섭 △장비 이원영 △교통기획 김수영 △교통운영 박종천 △교육정책 김순호 △복지정책 최호열 △경무담당관실(정책보좌관) 김학관 △생활질서과장 이충호 △여성청소년 조지호 △특수수사 최승렬 △강력범죄수사 김현기 △지능범죄수사 송병일 △범죄정보 최주원 △과학수사센터장 객순기 △수사국(사이버안전국 준비담당) 이성재 △경비과장 김광식 △경호 강연식 △경비과(아시아게임 준비담당) 배대희 △정보1과장 김광호 △정보2 박기호 △정보3 이용배 △정보4 장하연 △보안1 이은정 △보안2 김두연 △보안3 김병수 △외사기획 우종수 △외사정보 박창호 △외사수사 백동흙 △경무담당관실(대기) 백준태 △경찰대 △교무과장 반기수 △경찰학 전기완 △운영지원 안상엽 △학생 이재승 △치안정책연구소(기획운영) 이봉행 △지방이전건설담당 노재호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최재천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박성수 ▽경찰병원 △총무과장 김시택 ▽서울청 △홍보담당관 김성섭 △청문감사 김석열 △경무과장 김진표 △인사교육 최해영 △정보화장비 이화선 △경무과(사회안전) 정창배 △경무과(총리실) 윤시승 △생활안전과장 안종익 △생활질서 김성완 △112종합상황실장 우철문 △여성청소년과장 김창룡 △지하철경찰대장 송호림 △수사과장 김근식 △형사 이규문 △판역수사대장 박영진 △교통안전과장 박생수 △경비1 김병규 △경비2 연정훈 △정보2 정용근 △보안1 전병용 △보안2 이광석 △외사 이인상 △제1기동대장 하원호 △제2 박생근 △제4 변관수 △제5 김갑식 △22경찰경호대장 김소년 △국회경비 유진규 △청사경비 김상우 △101경비부대장 이준섭 △중부서장 윤소식 △중로 설광섭 △남대문 허찬 △서대문 윤후의 △혜화 이명교 △용산 진정무 △성북 한형우 △마포 위득량 △성동 이영삼 △서부 이명훈 △관악 김중보 △강서 이맹호 △강동 이창무 △종암 김재규 △구로 이훈 △서초 김영배 △양천 남구준 △도봉 이문수 △수서 조용식 △경무과(치안지도관) 박영대 △고법석 최현석 △박성민 이승협 ▽부산청 △청문감사담당관 조성환 △경무과장 김성식 △교통 류해국 △경비 김해주 △생활안전 권창만 △112종합상황실장 박중희 △수사과장 김주수 △형사 정진규 △정보 박화병 △보안 이선록 △동래서장 광명달 △남부 박노면 △해운대 김동현 △사상 정명시 △사하 신영대 △연제 김성수 △강서 정규열 △북부 김성훈 △기장 이동환 △경무과(대기) 김주전 박흥서 고영일 이갑형 △경무과(치안지도관) 윤영진 윤경돈 김기대 ▽대구청

△청문감사담당관 서진교 △경무과장 류상열 △정보화장비 김훈찬 △정보 이상탁 △보안 김용주 △생활안전 김영수 △112종합상황실장 정도영 △경비교통 정장진 △중부서장 이갑수 △동부 최석환 △서부 이원백 △북부 김대현 △수성 박희룡 △성서 이근영 △경무과(대기) 최병현 △경무과(치안지도관) 김한섭 ▽인천청 △홍보담당관 조종림 △청문감사 안정균 △정보화장비과장 황순일 △보안 정승용 △외사 이창수 △112종합상황실장 안영수 △수사과장 조은수 △경비교통(아시아게임 준비담당) 오부명 △국세공항공정찰대장 전진선 △남부서장 정지용 △남동 이성형 △부평 백운용 △서부 하용철 △계양 남승기 △강화 조유태 △경무과(치안지도관) 김원범 ▽광주청 △청문감사담당관 박석일 △경무과장 이수경 △보안 최정환 △112종합상황실장 박영덕 △경비교통과장 김영창 △북부서장 김학남 △경무과(치안지도관) 정경재 장영수 ▽대전청 △청문감사담당관 김택준 △경무과장 정병구 △정보화장비 김태규 △보안 박근순 △112종합상황실장 김종식 △경비교통과장 유재성 △청사경비대장 김기용 △동부서장 신희용 △둔산 오용대 △경무과(대기) 이종욱 박진규 △경무과(치안지도관) 임정주 ▽울산청 △홍보담당관 전오성 △청문감사 박영택 △경무과장 이정동 △정보화장비담당관 김진우 △112종합상황실장 채주욱 △수사과장 장종근 △경비교통 오병국 △보안 유은근 △중부서장 이원희 △울주 강호준 △경무과(치안지도관) 김성종 ▽경기청 △청문감사담당관 구본걸 △경무과장 신상석 △경비 이석권 △생활안전 오문교 △112종합상황실장 이한일 △수사과장 김정섭 △형사 김춘섭 △정보 최규호 △제2청 경무과장 김성근 △ 생활안전 김복남 △ 112종합상황실장 김학중 △ 수사과장 서상귀 △ 정보보안 정수상 △기동대장 안기남 △청사경비 이병하 △수원서부서장 조희련 △안양동안 이재술 △과천 이상기 △군포 박형길 △성남수정 박형준 △성남중원 신경문 △부천소사 김영일 △광명 권세도 △안산단원 구장희 △안산상록 김수희 △시흥 신윤균 △평택 팽정기 △화성동부 윤동춘 △용인서부 이석 △광주 윤성태 △여주 정성채 △양평 김창식 △하남 이문국 △의정부 이원정 △일산 강신후 △구리 황성모 △파주 김중규 △가평 김근수 △경무과(대기) 박춘배 △경무과(치안지도관) 이재홍 한상균 김태수 정희영 ▽강원청 △홍보담당관 김준영 △정보화장비 안승일 △생활안전과장 유윤종 △112종합상황실장 김형기 △수사과장 위강석 △정보 박문호 △보안 고진태 △동해서장 송민주 △태백 윤원욱 △속초 김창수 △삼척 광경호 △정선 반병욱 △횡성 윤치원 △고성 이흥만 △경무과(대기) 이종윤 △경무과(치안지도관) 엄기영 ▽충북청 △112종합상황실장 이우범 △수사과장 최종상 △정보 박세호 △보안 신현욱 △청주상당서장 임종하 △제천 심현규 △영동 오원심 △괴산 김수룡 △단양 김두련 △진천 김홍근 △경무과(대기) 최영진 △경무과(치안지도관) 이광숙 ▽충남청 △경무과장 박희용 △생활안전 이안복 △112종합상황실장 박세석 △경비교통과장 장권영 △보안 김판태 △천안동남서장 홍덕기 △공주 김호철 △예산 조항진 △서천 한달우 △경무과(대기) 명영수 △경무과(치안지도관) 최성환 ▽전

북청 △홍보담당관 신일섭 △경무과장 황대규 △112종합상황실장 박성규 △경비교통과장 최원석 △전주덕진서장 이승길 △완주 조병노 △고창 김주원 △임실 최호순 △진안 박승용 △경무과(치안지도관) 한도연 ▽전남청 △홍보담당관 최삼동 △경무과장 정재운 △112종합상황실장 채수창 △경비교통과장 이명호 △정보 임광문 △보안 김균 △목포서장 안동준 △여수 하태욱 △순천 우형호 △나주 이우진 △광양 장효식 △영광 백혜웅 △화순 이성순 △장성 노규호 △강진 한영록 △무안 박우현 △경무과(대기) 김재병 박승주 임동환 △경무과(치안지도관) 박희순 박종열 ▽경북청 △홍보담당관 김영환 △경무과장 김우락 △정보화장비담당관 이준식 △생활안전과장 김병찬 △112종합상황실장 이대형 △수사과장 박종문 △경비교통 김상렬 △정보 이상현 △보안 이수용 △포항북부서장 심덕보 △포항남부 이성호 △안동 김덕환 △김천 정은식 △영주 김광석 △영천 오동석 △상주 △문경 김청수 △의성 김용현 △봉화 박주진 △예천 박달서 △성주 이범규 △고령 정동식 △경무과(대기) 조헌배 △경무과(치안지도관) 정지천 ▽경남청 △홍보담당관 진종근 △청문감사 구철희 △경무과장 김한수 △생활안전 김광룡 △112종합상황실장 진영철 △수사과장 김명일 △경비교통 하민수 △보안 강신희 △외사 김상규 △마산중부서장 신현정 △진주 변항중 △김해중부 김흥진 △사천 백승면 △양산 박이갑 △창녕 이병진 △하동 이기주 △남해 최영철 △합양 추문규 △산청 박금룡 △경무과(치안지도관) 박천수 ▽제주청 △청문감사담당관 손동영 △경무과장 김학철 △112종합상황실장 박혁진 △정보과장 고성욱 △보안 조기준 △서귀포서장 강월진 (경정 전보) △강원 인제서장 진혜성 △충북 보은 김진광 △충남 청양 양철민 △전북 순창 최철수 △전남 구례 장상갑 △경북 청송 최상득 △경남 의령 최원기

◇국민일보 △수석논설위원 조용래 △사진부장 최종학



부고

◇강창호 씨 별세·태원 (주)아이디 대표 일원 헌법 재판소 재판관 문원 후쿠오카대 교수 부친상·박찬구 서울대 교수 김권구 계명대 교수 김재용 씨(사업) 장인상=1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40분 02-2258-5940

◇김봉구 이화여대 미대 명예교수(전 서울미술협회 회장) 별세·태곤 국민대 교수 수근 목사 부친상·이세나 한국여류조각회 총무 시부상=17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반 02-2227-7569

◇김상교 (구)몽비쥬 월간시계 편집장 별세·종우 루보 대리 종연 국민은행 계장 부친상·김현수 SK하이닉스 선임 장인상·이지애 동아닷컴 대리 시부상=19일 서울 상계백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02-938-5320

◇김효중 (주)라이프사이언스 대표 의중 중앙선관위 행정사무관 신중 현대해상 차장 부친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 02-3010-2291

◇남현우 분당남현우동물병원장 부친상·김재훈 아산태민엔지니어링 대표 장인상=18일 충남 아산 온천장례문화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41-532-8888

◇남일 전 금호그룹 부회장 별세·현승 현중 현석 현정 씨 부친상=1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

전 8시 반 02-3410-6908

◇박영수 대한한 의사협회 사무부총장 모친상=18일 경북 칠곡군 왜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54-976-4446

◇배석술 전 해운항만청 근무 별세·영민 삼성물산 상무 영규 한국투자증권 이사 부친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8시 반 02-3410-6920

◇성제 (주)동우엠씨 차장 모친상·장진순 전 동아일보 비상계획팀장 장성구 연합뉴스 그래픽뉴스팀장 장모상=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2-2258-5940

◇이민엽 미성상사 부회장 현엽 충남대 교수 혜경 연세대 명예교수 혜정 씨(재미 공인회계사) 혜문 성균관대 교수 모친상·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박찬웅 미국 보잉사 연구원 김용욱 고려대 교수 장모상=1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2-3410-6915

◇정재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부친상·김경신 유한킴벌리 차장 시부상=1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1일 오전 7시 반 02-3410-6902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 장인상=1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5시 02-3010-2265